

GOVP1200617865  
T0008299

# 쌀협상관련 기사모음집

2005. 9

농 립 부

# 목 차

I. 2004년 12월 기사 .....	9
II. 2004년 12월 사설·기고 .....	33
III. 국정조사 이전 기사·기고('05년 4~5월) .....	47
IV. 국정조사 이후 기사·사설('05년 6월) .....	57
V. 농민단체 의견수렴('05년 7~8월) .....	75
VI. 국회비준 전문가시각('05년 7월) .....	91
VII. 최근 기사·사설('05년 8월) .....	105

## 2004년 12월 기사

- [초점] 쌀 협상 결과 대체로 무난...농민 설득 '난제' <2004. 12. 30, 연합뉴스>
  - WTO 검증과 국회비준도 순탄치 않을 듯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2004.12.30, 연합뉴스>
- 쌀 협상 타결... 내년 6월부터 수입쌀 시판 <2004. 12. 31, 조선일보 A9면>
  -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농업의 과제 “쌀 산업 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 “생산조절로 과잉해소...정부개입 축소를”
  -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은 최대 성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확정 <2004. 12. 31, 서울경제신문 1면>
  - 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 日·대만보다 조건유리...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
    - 국회비준·WTO 검증 등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 할 듯
  -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 쌀 완전개방 10년 유예...9개국과 협상타결 <2004. 12. 31, 중앙일보 2면>
  - 이르면 내년 6월 수입쌀 시중판매
    - 농민연대 “협상무효” 반발, WTO 검증 후 국회비준, 쌀값 결정 시장에 맡겨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2004. 12. 31, 동아일보 A2면>
  - 정부안 확정...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 수입쌀 공세...품질경쟁 예고 <2004. 12. 31, 동아일보 A14면>
  - 의무물량 2014년까지 7.96%허용, 가격 국내산보다 10%정도 낮을 듯
- 쌀 관세유예 협상 WTO 통보 <2004. 12. 31, 경향신문 1면>
  - 의무수입량 평균 7.96%...내년 10월까지 시판
- 쌀 협상 최종결과 발표, 다시 시험대 오른 '개방농정' <2004. 12. 31, 경향신문 2면>
  - 값 낮추기 한계 '품질만이 活路'
    - 값 12만원 이하로 내리고, 영세농가 구조조정 통해 10년안에 경쟁력 갖추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2004. 12. 31, 내일신문 15면>
  - WTO 이행계획서 통보...수입쌀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판
-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1면>
  - 수입량 7.96%까지 확대...정부 WTO 통보
- **수입쌀 내년 6월 밥상에 오른다**<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A4면>
  -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
- **6월부터 수입쌀 국내시판**<2004. 12. 31, 문화일보 3면>
  - 정부 '쌀 관세화유예' 확정...국회비준 여부로 논란
- **수입쌀 내년 6월부터 시판**<2004. 12. 31, 서울신문 1면>
  - 의무수입량의 10%...관세화 10년 유예
- **재고 쌀 北지원 등 모색**<2004. 12. 31, 서울신문 6면>
  - 쌀 재고량의 48% 수입쌀 차지, 농민설득 등 국내협상 더 험난
  - “수입쌀 시판가 국산 도매가 수준”, 허상만 농림부장관 문답
- **수입쌀 내년 6월부터 시판**<2004. 12. 31, 한국경제 A1면>
  - 2014년까지 의무수입 7.96%로 확대 확정
- **수입쌀 이르면 6월 소비자 시판**<2004. 12. 31, 한겨레 1, 2면>
  - 정부, 관세화 유예 확정 WTO통보...농민단체 반발
- **‘10년’ 시간은 벌었는데...**<2004. 12. 31, 한겨레 41면>
  - 정부 쌀 협상 최종 타결, 농민반발 전면 재협상 요구-내년 봄 국회비준 진통 예상

## 2004년 12월 사설 · 기고

- [연합시론] 쌀 협상 후유증 최소화해야<2004. 12. 30, 연합뉴스>
- [사설] 쌀, 이젠 경쟁력 향상이다<2004. 12. 31, 서울신문>
- [사설] 쌀 협상 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2004. 12. 27, 한국경제신문>
- [사설] 쌀 2차 관세화 유예 이후<2004. 12. 31, 국민일보>
- [사설] 개방 이겨낼 농촌대책 서둘러야<2004. 12. 31, 동아일보>
- [사설]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2004. 12. 31, 서울경제신문>
- [사설] 쌀 개방 10년간 추가 유예됐지만<2004. 12. 31, 세계일보>
- [기고] 쌀 협상 편견 없이 보자<서진교 쌀·DDA협상대책연구단장, 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A6면>
- [기고] 쌀 협상, 결과 수용하고 앞날 대비를<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5. 1. 7, 동아일보 A33면>

## 국정조사 이전 기사 · 기고( '05년 4~5월)

- [기고] '쌀 협상 이면합의' 따져 보자<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2005. 4. 27, 문화일보 30면>
- [기고]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2005. 4. 28, 한겨레 21면>
- [기고] 쌀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2005. 5. 12, 한국일보 34면>
- [기자수첩] '쌀 협상 오간 말' 공개하는 나라<이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2005. 5. 13, 조선일보 A3면>
- [기고] 쌀 협상 국정조사에 바란다<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5. 5. 26, 문화일보 38면>

## 국정조사 이후 기사·사실( '05년 6월)

- **쌀 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무산 안팎**<2005. 6. 15, 연합뉴스>
  - 결론 제각각...비준동의안 처리도 이견
- **쌀 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6, 국민일보 4면>
  - 與野 '이면합의' 신경전...월말 국회비준 불투명
- **쌀 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무산**<2005. 6. 16, 내일신문 2면>
- **쌀 협상 國調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6, 동아일보 A8면>
  - 與野 “이면합의” “부가합의” 대치...비준 난항예고, 한나라 “허상만 前장관 위증죄로 고발할 것”
- **與野 이견에 ‘쌀 국조특위’ 단일보고서 실패**<2005. 6. 16, 서울경제신문 7면>
  -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 [時論] **할리우드 액션**<이신우 논설위원, 2005. 6. 17, 문화일보 30면>
- [테마진단] **안타까운 쌀 협상 국정조사**<박노형 고려대 법대교수, 2005. 6. 17, 매일경제신문 6면>
- [사설] **쌀 수입 조기관세화 검토해야**<2005. 6. 16, 제일경제 2면>
- [사설] **쌀 협상 비준동의안 가결해야**<2005. 6. 16, 국민일보 22면>
- **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5, 연합뉴스>
  - 35일간 활동 종료...비준연기론 대두
- [사설]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과 답답한 우리의 현실**<2005. 6. 22, 경향신문 31면>
- [사설] **지금 농민이 정부와 맞설 때인가**<2005. 6. 22, 중앙일보 34면>

## 농민단체 의견수렴 기사( '05년 7~8월)

- 정부 쌀 협상 비준 농민 의견수렴 나서 <2005. 7. 11, 연합뉴스>
- 정부 '쌀 협상' 농민의견 수렴 나섰다<2005. 7. 11, 문화일보 12면>
  - 농림부 장·차관-농민단체 대표 '합동 워크숍'
- 농림부 '農心읽기'<2005. 7. 15, 문화일보 12면>
  - 농민들 제안 정책반영, 쌀 협상 적극 의견수렴
- 박 농림 "농민대표도 협상 동행"<2005. 7. 15, 내일신문 14면>
  - 농림부·농업인단체 1박2일 워크숍...쌀 개방 대책 등 토론
- "쌀 협상 난제 함께 풀자" 머리 맞댄 정부·농민단체<2005. 7. 19, 세계일보 12면>
  - 워크숍서 격의 없는 토론
- 농림부 4일 농민단체와 쌀 협상 간담회 <2005. 8. 3, 연합뉴스>
- 쌀 협상관련 농민단체 간담회 개최<2005. 8. 3, 이데일리>
  - 지난 7월이어 두 번째 개최
- 농림부 쌀 협상보완책 20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서울경제 4면>
-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등 농림부, 20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한국경제 A6면>
- 물량 법제화 등 '쌀 협상 비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파이낸셜뉴스 2면>
- 농림부-농업인단체,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2005. 7. 18, 농수축산신문>
  - 쌀 협상 문제 해법 '함께 고민'
    - “국회비준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 의혹, 문제해결보다는 현안 나열 아쉬워, 실사구시적 대안 도출 노력 뒤따라야

국회비준 전문가 시각 기사·기고( '05년 7월)

- “쌀 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시장개방”, KIEP<2005. 7. 17, 연합뉴스>
- “쌀 협상 9월 국회비준 안되면 전면개방 불가피”<2005. 7. 18, 문화일보 12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예외조치 효력 없어져
- KIEP, “쌀 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관세화”<2005. 7. 17, 파이낸셜뉴스>
- [기고] 늦출 수 없는 쌀 협상 비준<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2005. 7. 15, 매일경제 7면>
  - 협의 벗은 쌀 협상 ‘이면합의’,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되어야
- [시론] 쌀 협상 비준 미룰 수 없다<임정빈 경상대 농경제학 교수, 2005. 7. 19, 한국경제신문 A34면>
  - 국회동의 지연엔 수급관리 큰 부담,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보완책 시급
- [칼럼] 이제 쌀 협상 문제 역사에 묻자<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5. 7. 27, 농민신문>
- [기고] 쌀 협상 국회비준 시급하다<정영진 농림부 국제통상 자문변호사, 2005. 7. 28, 문화일보 38면>
- [광화문에서] 쌀 개방의 딜레마<김상영 동아일보 경제부장, 2005. 7. 29, 동아일보 A26면>
- [기고] 쌀 협상 비준 논란 끝내야<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과학부 교수, 2005. 7. 30, 경향신문 23면>



최근 기사·사설('05년 8월)

- **쌀 가마당 지원금 1,639원 인상**<2005. 8. 18, 중앙일보 4면>
  - 국회비준 추가대책 확정, 당정 내년부터 올 공공비축 물량 400만 섬 농가서 매입
  - ▶ 뉴스분석- 또 손 든 정부...농민 요구 20건 중 16건 수용
-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2005. 8. 18, 서울신문 3면>
- **쌀 고정직불금 단가 상향 내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2005. 8. 18, 서울경제 4면>
- **쌀 고정직불금 70만원으로, '당정' 내년부터 10만원 인상** <2005. 8. 18, 국민일보 2면>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2005. 8. 18, 한겨레 6면>
- **쌀 고정직불금 내년 ha당 70만원으로** <2005. 8. 18, 머니투데이 27면>
  - 당정, 연체농가 희생지원도
- [기자의 눈] **농업경쟁력은 누가 챙기나**<2005. 8. 22, 한국일보 김신영 경제부 기자 A2면>
- [독자칼럼] **쌀 협상 국회처리 언제 할건가?**<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2005. 8. 2, 조선일보 A25면>
- [시론] **누구를 위한 쌀 협상 비준 거부인가** <안덕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5. 8. 5, 서울 A31면>
- [사설] **퍼주기식 농가지원 언제까지인가**<2005. 8. 18, 중앙일보 30면>
- [사설] **쌀 비준안 언제까지 반대할 건가**<2005. 8. 22, 서울신문 27면>
- [기고] **쌀협상 비준 늦출 수 없다**<2005. 8. 22, 농림부 차관보, 머니투데이 6면>
- [기고] **쌀협상 조기 비준돼야**<2005. 8. 29, 농림부 홍보관리관, 농민신문 >

# 여 백

# I . 2004년 12월 기사

여 백

## 《 관련 기사 》

- [초점] 쌀 협상 결과 대체로 무난...농민 설득 '난제' <2004. 12. 30, 연합뉴스>
  - WTO 검증과 국회비준도 순탄치 않을 듯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2004.12.30, 연합뉴스>
- 쌀 협상 타결... 내년 6월부터 수입쌀 시판 <2004. 12. 31, 조선일보 A9면>
  -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농업의 과제 “쌀 산업 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 “생산조절로 과잉해소...정부개입 축소를”
  -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은 최대 성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확정 <2004. 12. 31, 서울경제신문 1면>
  - 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 日·대만보다 조건유리...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
    - 국회비준·WTO 검증 등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 할 듯
  -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 쌀 완전개방 10년 유예...9개국과 협상타결 <2004. 12. 31, 중앙일보 2면>
  - 이르면 내년 6월 수입쌀 시중판매
    - 농민연대 “협상무효” 반발, WTO 검증 후 국회비준, 쌀값 결정 시장에 맡겨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2004. 12. 31, 동아일보 A2면>
  - 정부안 확정...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 수입쌀 공세...품질경쟁 예고 <2004. 12. 31, 동아일보 A14면>
  - 의무물량 2014년까지 7.96%허용, 가격 국내산보다 10%정도 낮을 듯
- 쌀 관세유예 협상 WTO 통보 <2004. 12. 31, 경향신문 1면>
  - 의무수입량 평균 7.96%...내년 10월께 시판
- 쌀 협상 최종결과 발표, 다시 시험대 오른 '개방농정' <2004. 12. 31, 경향신문 2면>
  - 값 낮추기 한계 '품질만이 活路'
  - 값 12만원 이하로 내리고, 영세농가 구조조정 통해 10년안에 경쟁력 갖추야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2004. 12. 31, 내일신문 15면>
  - WTO 이행계획서 통보...수입쌀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판
-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1면>
  - 수입량 7.96%까지 확대...정부 WTO 통보
- **수입쌀 내년 6월 밥상에 오른다**<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A4면>
  -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
- **6월부터 수입쌀 국내시판**<2004. 12. 31, 문화일보 3면>
  - 정부 '쌀 관세화유예' 확정...국회비준 여부로 논란
- **수입쌀 내년 6월부터 시판**<2004. 12. 31, 서울신문 1면>
  - 의무수입량의 10%...관세화 10년 유예
- **재고 쌀 北지원 등 모색**<2004. 12. 31, 서울신문 6면>
  - 쌀 재고량의 48% 수입쌀 차지, 농민설득 등 국내협상 더 험난
  - "수입쌀 시판가 국산 도매가 수준", 허상만 농림부장관 문답
- **수입쌀 내년 6월부터 시판**<2004. 12. 31, 한국경제 A1면>
  - 2014년까지 의무수입 7.96%로 확대 확정
- **수입쌀 이르면 6월 소비자 시판**<2004. 12. 31, 한겨레 1, 2면>
  - 정부, 관세화 유예 확정 WTO통보...농민단체 반발
- **'10년' 시간은 벌었는데...**<2004. 12. 31, 한겨레 41면>
  - 정부 쌀 협상 최종 타결, 농민반발 전면 재협상 요구-내년 봄 국회비준 진통 예상

2004년 12월 30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초점> 쌀협상 결과 대체로 무난..농민 설득 '난제'

WTO 검증과 국회비준도 순탄치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정부가 올해초부터 9개국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발표한 쌀협상 결과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대만 등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예 기간과 조건이 훨씬 유리하게 합의된데다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아 성공적 협상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시장 추가개방에 반대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놓았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과 국회비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무난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위해 협상국들에게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로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 등 협상국들은 당초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대한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1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1년여간의 협상 끝에 증량 수준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7.4%까지만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막판까지 집요하게 협상국들을 설득해 수입량을 7.96%로 늘리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한 전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협상단은 또 제3국으로 수입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수입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쌀 재고량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340만석에 달하면서 전체 쌀 재고량(올해 710만석 추정)의 47.9%에 달할 정도로 쌀재고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세화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을 줄이면 WTO 검증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협상 상대국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 ◆농민 설득 숙제로 남아

정부는 쌀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쌀시장 추가개방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농민 설득이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가 지난 28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쌀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민들은 정부가 협상시한에 쫓겨 수입쌀 시판 허용 등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정부의 협상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의 쌀협상 결과는 농업, 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행계획서 WTO 제출계획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 여주군 농민회는 정부가 연내 협상종료를 강행하면 31일 영동고속도로를 전면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WTO 검증과 국회비준도 순탄치 않을듯

정부는 수입쌀 입찰시기 등 기술적인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9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행계획서를 검증받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관측되고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도와 이집트 등 협상국 일부와의 협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 국가가 WTO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WTO검증과정을 통과하더라도 국회비준이라는 '큰 산'을 다시 넘어야 한다.

1년 넘게 걸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처럼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로서는 농심(農心)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비준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만약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4년 12월 30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종합2보)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쌀....

수입쌀 시판 의무수입물량 10%에서 30%로 점진적 확대  
의무수입물량 10년간 7.96%로 증량  
관세화 유예중 관세화전환 가능  
이행계획서 수정안 국회비준 동의받기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내년부터 시판된 뒤 2010년까지 30%로 확대되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에서 향후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중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관세화 유예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국제 쌀 가격, 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협상 최종 결과와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쌀협상국과 최종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지난 95년 1%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 쌀 소비량의 4%로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대로 전량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세화로 전환하면 관세율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TRQ수준과 DDA협상에 따른 물량 수준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천t)의 경우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11만6천159t(56.5%) ▲미국 5만76t(24.4%) ▲태국 2만9천963t(14.6%) ▲호주 9천30t(4.4%) 등으로 배분됐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된다.

아울러 수입쌀의 북한 등 제3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문구는 종전처럼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수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최종 허용 여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찰시기 등 기술적인 사항과 부가적인 사항은 세계무역기구의 검증 기간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 매듭지을 방침이다.

허상만 장관은 "WTO 검증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협상국과의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국가가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WTO검증이 끝난 뒤에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쌀협상 결과가 부결되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 협상 타결... 내년 6월부터 수입쌀 시판

##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농업의 과제

# “쌀 산업 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쌀 협상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농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최종 결과’의 ‘관세화 유예(쌀 수입제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이다.

본지는 이날 정부의 쌀 협상 자문단 역할을 해온 ‘쌀 대책 연구협의회’ 소속 대학교수와 국제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13명의 전문가들은 “합수 10년은 한국 농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장 개방이 대신인 만큼 언제라도 관세화(수입개방)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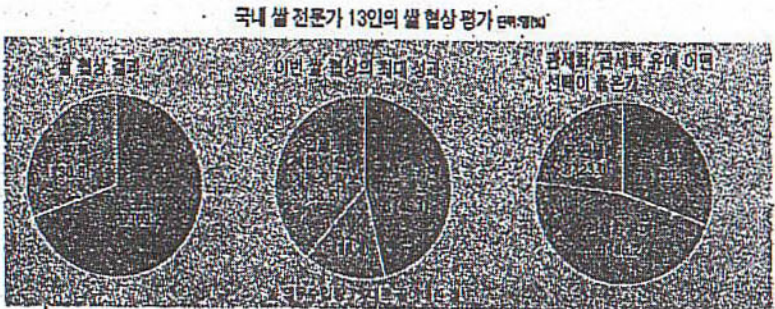
◆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쌀 협상의 결과에 대해 13명의 전문가 중 9명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또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연장’과 ‘수입쌀의 대북 지원 가능성 확보’를 이번 쌀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리

주요 항목	협약 내용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	2005-2015년까지 10년 연장
쌀 의무수입량	2005년부터 매년 2만 t씩 늘려, 2014년까지 4만8700 t (국내 소비량의 7.96% 수준, 현재는 4%)으로 늘림
발발용 수입할 시한	2005년 수입량의 10% (2만5500 t)를 발발용으로 사용(현재는 가공용으로만 사용, 2014년 이후 30%로 늘림)
수입할 국가별 배분	기존 수입량(2005년 5500 t)은 중국·미국·태국·호주에 우선 배분, 후기를 늘려주는 등량은 쌀 수출국들에 평균 배분
수입할 자수출, 해외원조 허용 여부	쌀 협상 여당계측사에 근거 조항 폐지

“생산량조절로 과잉 해소... 정부개입 축소를”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은 최대 성과”

나 이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13명 중 6명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4명은 이번엔 ‘관세화’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3명은 내년에 본격화될 도하 개발이행(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2-3년 뒤 조기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수입쌀

의 대북지원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 관세화 유예기간 도중 추가 부담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점도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남대 박준근 교수는 “쌀 의무수입량을 최대 40만 8700 t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은 관세화했을 경우 수입추경량 37만 t보다 많아 협상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전문가들은 외국쌀과



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확보 ▲관세화에 대비한 쌀 시장 가격의 인하 ▲생산량 조절을 통한 생산과잉 해소 ▲쌀 분쇄에 대한 정책의 개입 배제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대 정영인 교수는 “쌀 수출국인 동아시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시화되면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합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옳다”라며 “허투루리 쌀의 국내의

가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경대 사공용 교수는 “쌀 가격을 1가마당 17만원에 맞춰놓고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국산쌀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쌀유통구조의 혁신 유가능 확대, 생산비절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박사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쌀은 다품종이 섞여 사실상 균질한 품질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균일한 품질의 쌀 유통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종합미국처리장

A.1994년	수출국(미국·호주·태국)과 한국 쌀 수입 제한(관세율 40%) 합수 10년간 인조 쌀 의무수입량 10년 내 국내 소비량의 4% 수준(2005년 5500t)으로 늘림 것에 합의
A.2004년 1월 27일	한국 정부,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통보
A.2004년 1월-4월	미국·중국·태국·호주·가나·인도·에티오피아·미얀마·파키스탄 등 9개국에 협상 참여 의사 발표
A.2004년 5월	미국·중국 등과 1차 쌀 협상 시작
A.2004년 10월 19일	미국과의 6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최 기간 10년 합리
A.2004년 11월 3일	중국과 8차 협상(유예화 기간·발발용 의무수입량 등 협의 실패)
A.2004년 12월 16일	허상민 농림부 장관과 9차 협상(유예화 최 기간) 합의
A.2004년 12월 30일	농림부 쌀 협상 여당 대표 박준근(전남대) 유예 10년 추가 연장, 수입할 시한의 비율을 10%에서 30%로 증감해 확대, 의무수입량 10년간 7.96%로 증감

(RPC) 위주로 돼 있는 쌀 유통구조를 시군단위로 재편해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통합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수입쌀이 국산쌀로 취급된다면, 국산쌀에 혼합된 판매될 수도 있는 만큼 수입쌀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문가 명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동규 박사, 중앙대 윤석원, 서경대 사공용, 김현태, 김명환, 고려대 안승룡, 한두봉, 전남대 박준근, 경상대 임광민·김명태, 경북대 김승선, 전북대 소은열, 건국대 김명주 교수

## 쌀 협상 타결... 내년 6월부터 수입쌀 시판

##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농업의 과제

# “쌀 산업 구조조정, 시장기능에 맡겨야”

“쌀 협상 내용 지치는 나쁘지 않자만 농업 구조조정 기회 또 다시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최종 결과’와 ‘관세화 유예(쌀 수입제한) 선택’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이다.

본지는 이날 정부의 쌀 협상 자문단 역할을 해온 ‘쌀 대책 연구협의회’ 소속 대학교수와 국제연구기관 연구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13명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은 한국 농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장 개방이 대세인 만큼 언젠가라도 관세화(수입개방)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쌀 협상의 결과에 대해 13명의 전문가 중 9명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또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연장’과 ‘수입쌀의 대체 지원 가능성 확보’를 이번 쌀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러

■ 쌀 협상 결과 주요 내용 (종합)

주요 항목	협상 내용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	2005~2015년까지 10년 연장
쌀 의무수입량	2005년부터 매년 2만 t씩 증가, 2015년까지 4만2천 t (국내 소비량의 7.5% 수준, 현재는 4%로 설정)
협상용 수입량 시한	2005년 수입량의 10% (22만 t)를 발판용으로 사용 (현재는 가능용으로만 한정, 2005년 이후 30%로 통일)
수입량 국가별 배분	기본 수입량(22만 t)은 중국·미국·한국·호주에 우선 배분, 후기를 놓치는 통일은 쌀 수출국에 일고루 배분
수입량 재수출, 해외판권 허용 여부	쌀 협상 이행계획서에 명시 포함 제외

### “생산량조절로 과잉 해소... 정부개입 축소”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은 최대 성과”

나 이 시점에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13명 중 6명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4명은 이 밖에 ‘관세화’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3명은 내년에 본격화될 도하 개발이전(DDA)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2~3년 뒤 조기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수입쌀

의 대체지원 가능성을 확보한 점과 관세화 유예기간 도중 추가 부담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점 등이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남대 박준근 교수는 “쌀 의무수입량을 최대 4만 8천 t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은 관세화했을 경우 수입추정량 3만 t보다 많아 협상결과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전문가들은 외국곡과



외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곡산 쌀 품질 경쟁력 확보 ▲관세화에 대비한 쌀 시장 가격의 안정 ▲생산량 확보를 통한 생산과잉 해소 ▲쌀 분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배제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는 “쌀 수출국인 동아시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시화되면 쌀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허투루의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끌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 더 이상 정치는라에 뒤물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사공용 교수는 “쌀 가격을 1가마당 17만원에 맞춰놓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쌀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외국곡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곡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쌀유통구조의 혁신, 유통망 확대, 생산비 절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박사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은 다품종이 섞여 사실상 균질한 품질면의가 되지 않았다”며 “균일한 품질의 쌀 유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종합이곡처리장

■ 쌀 협상 일정

A.1994년	우루과이(브라질)에서 한국과 쌀 수입 제한(관세화 유예) 협상 10년간 인조, 쌀 의무수입량 10% 내 국내 소비량의 4% 수준(22만 t)으로 통일 가능 합의
A.2004년 1월~2월	한국 정부,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WTO에 발표
A.2004년 1월~4월	미국·중국·한국·호주·가나·인도 등 6개국이 포함된 다자간 WTO 협상 동 5개국에 포함 합의 의사 발표
A.2004년 5월	미국·중국 등과 1차 쌀 협상 시작
A.2004년 10월~12월	미국과의 6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합의
A.2004년 11월 3일	중국과 8차 협상(유예기간 7년)의 쌀 수입량 협정 등 합의 실패
A.2004년 12월 15일	미국과 9차 협상(유예기간 7년)의 쌀 수입량 협정 등 합의 실패
A.2004년 12월 20일	농협부 쌀 협상 최종 결과 발표(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수입량 시한과 수출량 30%에서 30%로 통일) 합의(수입량 10년간 1.8%로 통일)

(RPC) 위주로 돼 있는 쌀 유통구조를 시군단위로 재편해 자기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유명한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수입 쌀이 국산쌀로 둔갑한다든가, 국산쌀이 혼합된 판매될 수도 있는 만큼 수입 쌀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설문조사기 [www.chonson.chosun.com](http://www.chonson.chosun.com)

전문가 명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박용규 박사, 중앙대 윤석원, 서강대 사공용, 강원대 정영일, 고려대 양승용·한두원, 전남대 박준근, 경상대 임광현·김병태, 경북대 김홍일, 전북대 소순일, 건국대 정경주 교수

### 쌀관세화 10년 유예

쌀 시장 개방이 추가로 10년간 연장됐다.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O)을 오는 2014년까지 7.96%로 확대하고 수입 쌀의 방출용 시판물량도 2010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허삼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도하개발협약(DDA) 협상과 국제 쌀 가격, 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쌀 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편

관련기사 mykim@sed.co.kr

### ■쌀관세화 유예 10년연장 확정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당국인 농림부는 일단 이 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앞으로 상당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농림부는 미국과 중국 등 협상국들이 당초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의무수입물량 15% 수준을 대폭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7.4%까지만 늘려줄 수 있다며 막판까지 상대국들을 설득했다.

정부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쌀협상을 결론지은 것은 경제적 득실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 ▶ 쌀협상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 ▲ 관세화 유예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 2009년에 다자간 용인절감 실시, 유예기간중 단계적 관세화 전환가능
- ▲ 의무수입물량 2009년 22만5,575톤(4.4%)에서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공통증명
- ▲ 소비자 시판물량은 2009년 전체 의무수입물량 10%에서 2010년 30%까지 확대

# 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 日·대만보다 조건유리... 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 국회비준·WTO검증 등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 할듯

그 결과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한 전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한 셈이다.

협상단은 또 제3국으로 수입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수입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수입 쌀 재고량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340만상에 달하면서 전례 쌀 재고량(올해 710만성 추정)의 47.9%에 달할 정도로 쌀 재고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허삼만 농림부 장관은 "수입 쌀의 재수출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비준과 농민단체 반발, 외부적으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된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행계획서를 검증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주요국들과 협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 협상국들과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들 국가가 WTO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

국회비준도 받아야 한다. 발사부터 농촌 지역 국



허삼만 농림부 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승욱기자

회의원들은 비준거부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 1년6개월이나 걸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처럼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건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며 "그 동안 쌀 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협상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만약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난제이다.

정부가 이날 중순 정경협상안을 가지고 개최한 공청회도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도상에서 차장시위를 벌이는 등 농민단체들은 쌀협상 무효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라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갑기자 mykim@sed.co.kr

##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소비자들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중국과 미국 같은 물론 타이의 안남미, 인도-파키스탄의 향미(香米) 등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쌀 협상 결과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음료만 공급되던 수입 쌀이 내년부터 제한된 물량 내에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들 수입 쌀은 부패를 막기 위해 일단 현미 상태로 조달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국영무역 형태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탈곡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또 최고낙찰가 순서로 수입권을 배분받은 민간회사에서 수입 쌀을 다시 2~10kg 단위로 소포장한 뒤 원래의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는 과정을 거쳐지게 된다.

### 국내의 가격차 만큼 부과금 부과 국산쌀과 비슷한 값에 거래될 듯

수입 쌀이 국산 쌀보다 낮은 값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반에 판매할 때 정부가 수입 쌀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만큼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대략 국내의 가격차의 70~90% 정도를 수입부과금으로 붙인 가격이 최저낙찰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국산과 비슷한 값에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용으로 수입되는 쌀은 내년 2만2,558톤에

서 오는 2014년 12만2,610톤으로 전체 쌀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서 3.7%까지 늘어난다. 당장 국내 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이었지만 수입 쌀의 방출이 늘어날수록 국내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수요감소에 따른 국산 쌀값의 간헐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미 외국산 '고품질 쌀' 수요가 상당히 형성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될 경우 1만톤이 풀릴 때마다 쌀 가격을 1kg당 10원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80kg짜리 쌀값을 2,000원 가량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갑기자 mykim@sed.co.kr



### 쌀관세화 10년 유예

쌀 시장 개방이 추가로 10년간 연장됐다. 대신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오는 2014년까지 7.96%로 확대하고 수입 쌀의 반팔용 시판물량도 2010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허삼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국제 쌀 가격, 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쌀 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김민걸기자 mykim@sed.co.kr

### ■쌀관세화 유예 10년연장 확정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당국인 농림부는 일단 이 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앞으로 상당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농림부는 미국과 중국 등 협상국들이 일초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의무수입물량 15% 수준을 더욱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7.4%까지만 늘려줄 수 있다며 약권까지 상대국들을 설득했다.

2009년 쌀관세화 유예 10년연장 확정	
△ 관세화 유예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2009년에 다자간 통관협정 실시 유예(긴급-인제든지 관세화 전환가능)	
△ 의무수입물량 2009년 22만5,575톤(4.4%)에서 2014년 40만3,700톤(7.96%)까지 교통증량	
△ 소비자 시판물량은 2009년 전체 의무수입물량중 10%에서 2010년 30%까지 확대	

# 매듭 풀었지만 農心이 문제

日·대만보다 조건유리... 수입쌀 재수출도 탄력대응  
국회비준·WTO검증 등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 할듯

그 결과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낮추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한 전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한 셈이다.

협상단은 또 제3국으로 수입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수입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수입 쌀 재고량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340만상에 달하면서 전체 쌀 재고량(올해 710만상 추정)의 47.9%에 달할 정도로 쌀 재고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허삼만 농림부 장관은 "수입 쌀의 재수출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 국회비준과 농민단체 반발, 외부적으로는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행계획서를 검증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주요국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기 때문에 검증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 협상국들과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들 국가가 WTO 검증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

국회비준도 받아야 한다. 벌써부터 농촌 지역 국



허삼만 농림부 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은용식기자

회의원들은 비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년6개월이나 걸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처럼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가 관세화로 전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건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며 "그 동안 해온 쌀 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다시 협상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만약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일단 관세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쌀 협상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난제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 잠정협상안을 가지고 개최한 공청회도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도산에서 시장사위를 받아오는 등 농민단체들은 쌀협상 무효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은 시간 문제라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걸기자 mykim@sed.co.kr

##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소비자들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중국과 미국 쌀은 물론 타이의 안남미, 인도-파키스탄의 향미(香米) 등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쌀 협상 결과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던 수입 쌀이 내년부터 제한된 물량 내에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들 수입 쌀은 부패를 막기 위해 일단 현미 상태로 조달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한 국영무역 형태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탈곡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또 최고낙찰가 순서로 수입권을 배분받은 민간회사에서 수입 쌀을 다시 2~10kg 단위로 소포장한 뒤 원래의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는 과정을 거쳐게 된다.

국내의 가격차 만큼 부과금 부과  
국산쌀과 비슷한 값에 거래될 듯

수입 쌀이 국산 쌀보다 낮은 값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반에 공개할 때 정부가 수입 쌀에 대해 국내의 가격차만큼 수입부과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대략 국내의 가격차의 70~90% 정도를 수입부과금으로 붙인 가격이 최저낙찰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국산과 비슷한 값에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팔용으로 수입되는 쌀은 내년 2만2,558톤에

서 오는 2014년 12만2,610톤으로 전체 쌀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서 3.7%까지 늘어난다. 당장 국내 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하겠지만 수입 쌀의 방출이 늘어날수록 국내 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수요감소에 따른 국산 쌀값의 간헐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미 외국산 '고품질 쌀' 수요가 상당히 형성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쌀이 반팔용으로 시판될 경우 1만톤이 풀릴 때마다 쌀 가격을 1kg당 10원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60kg짜리 쌀값을 2,000원 가량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걸기자 mykim@sed.co.kr

— 쌀 완전개방 10년 유예 - 9개국과 협상 타결 —

# 이르면 내년 6월 수입쌀 시중 판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쌀인접이나 동태 소매점 등에서 수입 쌀을 사들여 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거나 때 등 가공용으로 수입 쌀이 사용됐다. 수입 쌀 시판량은 내년 28만가마(30kg 기준, 2만2557t)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153만가마(12만2610t)가 된다. 국내의 가격차를 감안해 정부가 수입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판 가격은 국산 쌀값과 비슷하거나 약간 쌀 전담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쌀 시장 완전개방(관세화)을 더 무기로 미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표 참조>

199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완전개방을 미뤘는데 이를 10년 더 연장한 것이다. 대신 현재 20만5000t의 무수입물량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지금보다 배가 많은 40만8700t을 수입하기로 했다. 관세화 유예기간 중에도 인제는 관세화로

## 농민연대 '협상 무효'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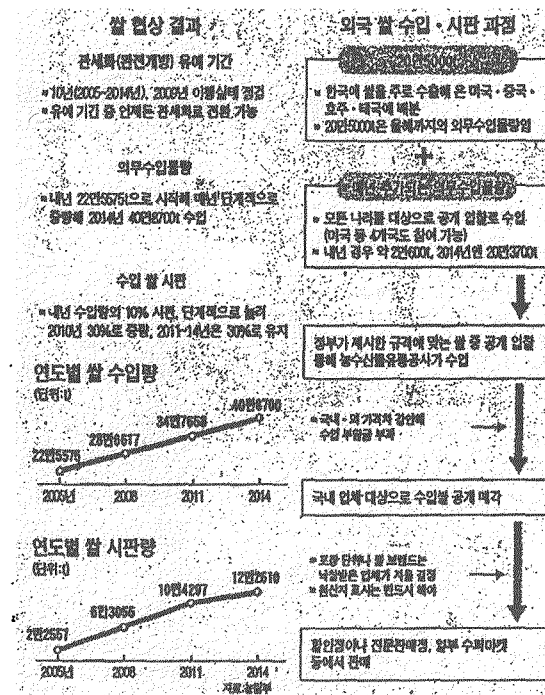
전환할 수 있고, 합의대로 10년간 관세화될. 미국도 2015년부터는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연대는 "국민적 합의 없는 쌀 협상은 무효며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 쌀 판매=민간 업체가 직접 쌀을 수입할 수는 없고 농림부 산하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일괄 수입한다. 또 아무 쌀이나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할 때마다 제시하는 품종과 품질 등급 등을 충족하는 쌀만 수입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과 지린(吉林)성 등 중국 동북 3성에서 생산된 쌀이 주로 수입되고, 쌀알이 길쭉한 태국산과 독특한 향이 나는 인도산 향미 등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쌀 중 쌀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고가의 일본 쌀은 수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된 쌀은 공개 입찰을 통해 국내 쌀 도매상에 판매된다. 몇kg짜리도 포장해서 팔지, 제품명을 무엇으



로 할지는 국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포장지에 어느 나라 쌀인지 표시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현지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마지마 도정은 국내 업체가 해야 한다. 시판 초기에는 유통업체 등이 농민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매장보다는 도매상을 통해 식당용으로 주로 팔릴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절차=정부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상 결과를 담은

## WTO 검증 후 국회 비준

이행계획서 초안을 제출했다. WTO는 이 안을 토대로 협상 결과가 WTO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검증은 3개월가량 걸린다. 검증이 끝나면 최종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농림부 장관은 "국회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관세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입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시급=정부는 시장을 완전히 열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수입에 따른 영향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의 시간을 버는 쪽

## 쌀값 결정 시장에 맡겨야

을 선택했다. 이 같은 의도를 살리려면 당장 내년부터 추곡수매제 폐지 등 농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쌀값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는 제도가 지속되면 나중에 시장을 완전 개방할 때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영일 서울대(경제학) 교수는 "관세화했을 때와 똑같은 강도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농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도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달리지 말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 정부안 확정...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A14면에 관련기사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쌀 의무 수입물량을 현행 약 21만5000t(1988~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의 4%)에서 2014년까지 40만8700t(7.96%)으로 늘려야 한다. 이 가운데 10~30%에 해당되는 물량은 소비자에게 발급용으로 판매해야 한다.

관세화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서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올해까지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관세화 유예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외 기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뒤 관련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는 약 3개월 동안 WTO 회원국의 정검을 거쳐 국외 기준을 받으면 즉시 발효되므로 이르면 6월경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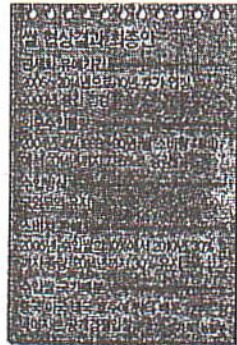
기준을 받지 못하면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관세화 의무' 발생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하성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앞으로 하계발아종다(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일정량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며 DDA 협상결과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모두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쌀 협상단은 관세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때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협상 상대국과 합의했다.

허 장관은 "WTO 회원국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이익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검증기간에 협의 불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일부 협



상 상대국과의 부가적인 정검에 대해서는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지원 기자 cha@donga.com

# 수입쌀 공세... 품질경쟁 예고

정부가 쌀 협상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추가 연장'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일단 '전면 개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에 따른 대가로 내년 부터 수입쌀이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발급용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쌀 생산 능력이 심리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절반의 성공' = 정부 쌀 협상단이 이날 내놓은 협상 최종 결과는 17일 공개한 잠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관세화 추가 유예기간 10년제인 2014년 의무수입물량이 41만 t(1988~19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의 8%)에서 40만8700t(7.96%)으로 0.04%포인트 줄었다.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전례에 비하면 때 한국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의무물량 2014년까지 7.96% 허용  
가격 국내산보다 10%정도 낮을듯

20년간 7.96%를 허용한 것이므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 수입쌀의 제3국 재수출 문제는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대북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인 7.4%와는 차이가 크며 관세화를 선언할 경우 예상 수입량이 7.1~7.5% 이하가 될 확률이 95%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성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를 3년 뒤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뒤 DDA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쌀 소비자에게 판매 =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는 빨라야 내년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정검하고 국외 기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쌀의 판매 절차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수입쌀은 원산지과 브랜드가 표시돼 판매되며 가격은 국내 쌀값보다 10% 정도 낮을 것으로 농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산보다 80kg 기마당 1만~2만 원 저렴한 가격이다.

▽남은 고비 협상내용 =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이행계획서에 대한 WTO 회원국의 정검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인도와 이집트 등 일부 협상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검기간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외 비준에 1년이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방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의 쌀 협상 결과는 농업, 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차지원 기자 cha@donga.com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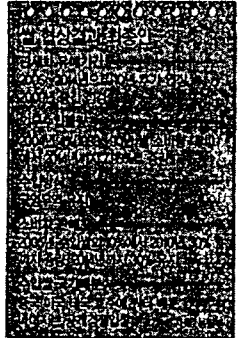
## 정부안 확정... 수입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A14면에 관련기사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쌀 의무 수입물량을 현행 약 21만5000t(1988~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의 4%)에서 2014년까지 40만8700t(7.96%)으로 늘려야 한다. 이 가운데 10~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소비자에게 반팔용으로 판매해야 한다. '관세화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서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올해까지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관세화 유예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외 비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뒤 관련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서는 약 3개월 동안 WTO 회원국의 점검을 거쳐 국외 비준을 받으면 즉시 발효되므로 이르면 6월부터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가 시작된다. 비준을 받지 못하면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하상민(許祥民) 농림부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앞으로도 하계(夏)아젠다(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더라도 일정량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며 DDA 협상결과도 지금으로부터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모두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쌀 협상단은 관세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때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협상 상대국과 합의했다. 허 장관은 "WTO 회원국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검증기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일부 협



상 상대국과의 부가적인 검증에 대해서는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차지환 기자 che@donga.com

# 수입쌀 공세... 품질경쟁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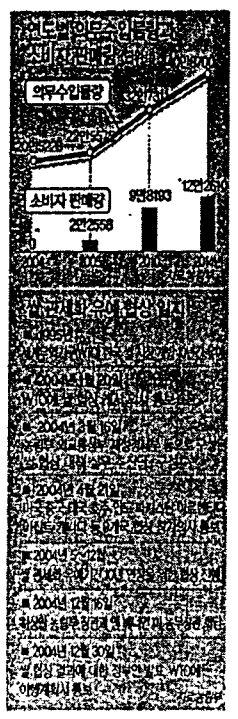
정부가 쌀 협상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관세화 유예 기간 10년 추가 연장'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일단 '전면 개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에 따른 대가로 내년 부터 수입쌀이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반팔용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쌀 생산 농가에 심리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결판의 성공' = 정부 쌀 협상단이 이날 내놓은 협상 최종 결과는 17일 공개한 잠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관세화 추가 유예기간 10년제인 2014년 의무수입물량이 41만 t(1988~1990년 연평균 쌀 소비량의 8%)에서 40만8700t(7.96%)으로 0.04%포인트 줄었다.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 1년간 8%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국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  
의무물량 2014년까지 7.96% 허용  
가격 국내산보다 10%정도 낮을 듯

20년간 7.96%를 허용한 것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뤘다는 평가다. 또 수입쌀의 제3국 저수율 문제는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대외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인 7.4%와는 차이가 크며 관세화를 선택할 경우 예상 수입량이 7.1~7.5% 이하가 될 확률이 95%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경제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상민(許祥民) 농림부 장관은 "도하계(夏)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3년 유예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뒤 DDA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쌀 소비자에게 판매 =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는 말리야 내년 6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점검하고 국외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쌀의 공매 절차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쌀은 안전지와 브랜드가 표시돼 판매되며 가격은 국내 쌀값보다 10% 정도 낮을 것으로 농업중앙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산보다 80kg 가마당 1만~2만 원 저렴한 가격이다. ▽남은 고비 협상선 =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이행계획서에 대한 WTO 회원국의 점검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인도와 이집트 등 일부 협상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점검기간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외 비준에 1년이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럴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방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의 쌀 협상 결과는 농업, 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제협상을 촉구했다. 차지환 기자 che@donga.com



# 쌀 관세유예 협상 WTO 통보

### 의무수입량 평균 7.96%...내년 10월까지 시판

쌀 관세유예를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낮은 관세율(5%)로 물어다 하는 의무수입량(TRQ)이 해마다 늘어 2014년에는 현재와 2배(1988~90년 평균소비량 7.96%)에 이르게 된다. 1관천기사 2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세계무역기

구(WTO)사무국에 관세화 유예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 편성이 끝나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허장관은 "WTO 회원국 점진 과정에서 별다른 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비준동

의안이 부결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관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내년 8월부터 국제입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일반소비자가 외국 상표가 붙은 수입쌀을 슈퍼나 할인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7기  
kangok@kyunghyang.com

신 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가 7일, 대통령과 사법부가 각 4인씩 추천키로 했다.

신용관계법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을 완화해 도입하자 한나라당이 반대해온 편집위원회의 독자권위위원회 설치에 임의조항으로 남겨뒀다.

기공관리기본법은 '연회 금지'에 의 허용'이란 연기금의 주식부자를 '연회 허용'에의 금지'로 바꿨다.

현행 국회 예결소위는 세제 예산안과 관련,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가 당초 제시한 1백31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의 손증한 1백34조4천억원을 의결했다.

대신 특별회계 예산은 64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이 갈라져 전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는 당초보다 9천6백억원이 쪼들었다.

김정호 기자 kangok@kyunghyang.com

### 쌀 협상 최종결과 발표

### 다시시험대오른 '개방 농정'

# 값 낮추기 한계 '품질만이 活路'

쌀협상이 되풀이할 수 없는 '투비코깅' 건설에 따라 한국농업도 이제 본격적인 개방농정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30일 9개 수출국과의 최종합의를 거쳐 세계 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정부의 쌀관세와 유예 이행계획서(CS)대로라면 우리에게 주어질 시험은 길이가 10년. 이 안에 우리쌀이 수입량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2015년부터 시장자유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

◇추가 개방 여파 얼마나=내년부터 쌀수입 시장 개방을 10년간 머무는 대신 저율관세(5%)로 들어오는 의무수입량(TRQ)이 2014년까지 현재(20만5천 t)의 2배 가까이 40만8천7백 t으로 늘어난다. 올해 1인당 소비량(81.98kg) 기준으로는 5백만명이 1년간 소비하는 양이며 1인당 소비량이 10% 줄 것으로 보이는 2014년 기준으로는 5백50만명(80kg 기준 5백12만가마)이 1년간 먹는 양이다.

물론 수입쌀은 대부분 파자·술 등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밥짓는 쌀로 유통되는 비율이 내년 10%에서 2010년부터 30%선으로 유지돼 실제로 식탁에 오르는 쌀은 2014년에 12만3천 t(1백70만명분)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그동안 쌀관세화를 주장해온 충북대 성진근 교수는 "정부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10년 뒤 한국농정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다.

400% 정도의 관세장벽을 설치하면 추가개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내년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관세감축을 지켜본 뒤 다시 관세화 여부를 논의하고 그때까지 늘어날 의무수입량은 보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값 12만원 이하로 내리고 영세농가 구조조정 통해 10년안에 경쟁력 갖춰야

◇우리쌀의 경쟁력=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관세화유예를 택한 데는 '우후쿠이아온드(UR) 이후 뛰어난 10년'이 원죄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1994년 UR협상 이후 42조원을 투입해 농어촌구조개선을 꾀했지만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경시대 임정빈 교수는 "쌀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데다 우리는 정치논리 때문에 수매량을 줄이는 대신 수매가를 올리는 정책으로 일관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신재로 80kg 추

곡수매가(산동급 기준)는 95년 13만2천6백80원에서 2003년 16만7천7백20원으로 물가상승률(30%)과 비슷하게 28.4%포인트가 오른 반면 2001년 이후 최저 쌀값은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수입쌀 가격은 5%관세를 포함해 3만9천원으로 국산의 4분의 1 수준이면서 생산비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췄다면 2014년까지 쌀값을 80kg 가마당 10만~12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외 문제점=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부터 수입쌀이 추가개방되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 논면적이 1백만ha에서 2014년 76만ha로 23%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에도 쌀재고가 1천만섬에 이르고 쌀 소비량도 해마다 줄고 있어 논이 10~20% 감소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 77만ha의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7만 가구의 전업농(호당 6ha 이상)을 육성,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되 경쟁력 없는 한계농지나 영세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쌀농사를 포기해도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이 마땅치 않고 정부가 쌀농사를 유지하면 쌀값 하락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직할제를 통해 거의 100% 가까이 소득을 보전 해주므로 의외로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외경제연구원 송유형 박사는 "아무리 구조 조정을 통해 생산비를 낮춰도 결국 품질경쟁력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영농 규모가 100배 정도 큰 미국 캘리포니아나 값이 우리쌀의 12~15% 수준인 중국 헤이룽장성 쌀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기 기자 kangok@kyunghyang.com

# 쌀 관세화 유예 10년 추가연장

## WTO 이행계획서 통보 ... 수입쌀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판

우리나라 쌀 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간 추가 연장된다.

하지만 이 대가로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내년 22만5575톤(88~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매년 일정하게 늘려나가야 한다. 또 이 가운데 10~30%에 해당하는 물량은 소비자에게 밥쌀용으로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구랍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쌀 관세화 유예방침을 확정하고 2005년 상반기중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뒤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이행계획서는 약 3개월간 WTO 회원국의 점검을 거쳐 국회 비준을 받으면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이르면 올 6월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지금처럼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되 내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시장에 판매토록 했다.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되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20

만5000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허 장관은 "이행 5년차인 2009년에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유예기간중 언제든지 추가 부담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쌀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했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초부터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수입쌀의 국가별 배분은 기존 물량(2004년 20만5000톤)의 경우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11만6159톤(56.5%) ▲미국 5만76톤(24.4%) ▲태국 2만9963톤(14.6%) ▲호주 9030t(4.4%) 등으로 배분됐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

수입량 7.96%까지 확대...정부 WTO 통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중국 동북 3성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평야에서 생산된 외국쌀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른다.

수입쌀은 국제 입찰 과정을 거친 뒤 국내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80kg(참 가마) 기준으로 국산쌀보다 1만~2만원 정도 싸게 판매될 것으로 국제 농업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 관여용 외국쌀 수입은 내년 2만2557t(15만8000섬)이 수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4만7923t, 2010년 9만8193t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국내 농업계에 지각변동을 불고 올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쌀시장 개방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미국 태국 등 9개국과 협상에 들어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행 5년제인 2009년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 20만5000t에 달했던 쌀 의무수입물량(TRQ)은 2014년까지 40만8700t 수준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A4면에 계속  
채수환·송성훈기자

# 수입쌀 내년 6월 밥상 오른다

다시연서계속

쌀 완전개방 10년 늦춰

올해 전체 소비물량 중 4%에 달했던 가공용 외국쌀 규모가 10년 뒤에는 약 2배인 7.96%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6월 처음 수입되는 소비자 시판용 외국쌀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의 자코니카(중단립종) 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협상국은 2001~2003년 가공용 수입 실적을 반영해 국가별 수입 물량을 배정했고 해마다 늘어나는 신규 물량은 국제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0만5000t 수입 물량 중 중국은 11만6159t으로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쌀이 5만76t, 태국 쌀이 2만9983t, 호주 쌀이 9030t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 판매용 수입쌀은 중국 하이농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동북 3성과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 전체 수입 물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아울러 태국에서 생산되는 인디카(장립종) 쌀인 '안남미'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향기나는 고품질 쌀인 '향미'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국내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던 안남미와 향미는 국내 주재 외국인은 물론 일부 여행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쌀협상 의무이행 계획서는 내년 초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기로 결정돼 국회 통과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국내 농업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는 협상국과 언제든지 관세화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관세화 전환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협상단은 이와 함께 제3국으로 수입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해 수입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수입쌀 재고물량은 올해 710만섬 규모로 추정돼 전체 쌀 재고량의 47.9%에 달하며 최근 2~3년 간 쌀 재고 물량의 급증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놓고 "정부의 쌀협상 결과는 농업과 농민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WTO 이행계획서 제출계획 전면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 여주군 농민회는 정부가 연내 협상 종료할 강행하면 31일 영동고속도로를 전면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언발과 언초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6월부터 수입쌀 국내시판

정부 '쌀 관세화유예' 확정... 국회비준 여부로 논란

■ 쌀협상이 2005년부터 10년간 쌀 시장 완전개방(관세화)을 늦추는 대신 의무수입물량(TRQ)은 2배 가까이 늘리고, 수입쌀중 10~30%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아같은 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일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연초부터 정치권내 최대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6월중 수입쌀 판매=1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쌀협상 결과에 따르면 쌀 관세화는 2005년부터 10년간 유예되는 대신 현재 20만5000t인 낮은 관세의 의무수입량은 2004년의 배 가까운 40만8700t으로 증

가한다. 또 수입쌀의 10%인 2만2557t이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시판되는 것을 시작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쌀은 10년 뒤 12만2610t까지 늘어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과 국제입찰·공매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르면 2005년 6월중 중국이나 미국쌀, 인도의 '항미' 등이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쌀 1만t이 시판될 경우 국내 쌀 kg당 가격이 10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럴 경우 2만2557t이 시판되는 2005년에는 80kg 한가마당 쌀값이 2000원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국회비준 난항 예상=정부는 쌀 관

세화 유예 연장 조건에 대해 연초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로 결정했지만 쌀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쌀협상 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에 국회비준을 받겠다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대부분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쌀협상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가 책임지기 부담스러운 쌀협상 결과를 국회에 떠넘겼다"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대도 "정부 쌀협상 결과는 농업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규모 차량 시위 등을 경고했다. 처봉현기자



**발견사·관세화·관세화**

9월 관세화 유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의무수입량  
2005년 22만5575톤 - 60년 인플레이션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만6700톤(7.9%)까지 증량

○ 소비자 시판  
2005년 의무수입량의 10%, 6년차인 2010년, 30%, 2014년까지 30% 유지

○ 이행상황 중단 협정  
이달 5년차인 2009년

○ 관세화 권유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관세화  
인행 가능 권리 확보

○ 의무수입량용 기준협정  
(20만5000톤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워터 배정)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대신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수입 물량(TFC)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 2014년 40만 6700톤으로 확대된다.

# 수입쌀 내년6월부터 시판

## 의무수입량의 10%... 관세화 10년 유예

의무수입량의 10%가 일반 가정용 밥쌀로 내년부터 시판된다. 지금까지는 떡·쌀과 자 등 가공용으로만 쓰여왔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관세화(쌀사, 장 원전개방)로 돌아설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받았다.

▶ 관련기사 6면

정부는 30일 협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의무수입량 증량 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CS)·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3개월에 걸친 WTO의

검증이 끝나 최종안인 마련되면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안장의 조건으로 올해 1988~90년 국내 쌀 소비량 대비 4% (20만 5000t)였던 의무수입량을 해마다 늘리 2014년에는 7.96% (40만 6700t)까지 확대하기로 협상국들과 최종 합의했다.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차츰 늘려간 뒤 그 뒤에는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 연장 첫해인 내년에는 22만 5575t이 수입돼 이중 10%인 2만 257t (115만 6550섬)의 외국쌀이 떡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팔리게 된다.

김세훈기자 shiung@soul.co.kr

## “재고쌀 北지원등 모색”

쌀재고량의 48% 수입쌀 차지

농민소득등 국내협상 더 힘난

정부가 쌀 관세화(쌀사장 원전개방)를 10년간 더 미루기로 미국·중국 등 9개국과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기존 10년(1985~2004년)에 더해 총 20년 동안 원전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는 필리핀은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대국들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게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自評)이다. 2014년에 기준 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7.96% (연간 40만 6700t)까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당초 대부분 협상국들은 기준연도 대비 15% (80만t) 수준의 증량을 요구했다. 20% (100만t) 산을 요구한 나라도 있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협상국들이 9% 안팎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는 의무수입량을 7.4%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막판까지 집요하게 협상국들을 설득해 수입량을 7.96%로 늘리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연간 8%, 1

년간 8%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전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했다는 것은 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입쌀을 북한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타놓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높아지는 쌀 재고 풀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쌀 재고량은 710만섬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600만섬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수입쌀 재고량이 전체의 47.9%인 340만섬에 달하고 있어 쌀 재고량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소득은 차치하더라도 WTO 검증과 정 통과,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협상, 국회 비준 등 아직 세부적인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쌀협상 결과 발표와 함께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 WTO의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원 76명은 이달 초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김세훈기자 shiung@soul.co.kr

## “수입쌀 시판가 국산도매가 수준”

■ 허심만 농림장관 문답

허심만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20년간(1985~2014년) 유예받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유예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수입쌀은 언제,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나.

-시민용 쌀은 포장쌀 형태로 정부대행기관에서 수입해 차익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가격은 국내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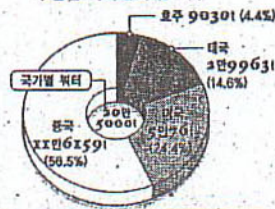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이번 협상은 대북 지원과 관계가 없다. 높아지는 수입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칙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 대북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국회비준 절차와 비준받지 못할 경우 대책은.

-국회비준 동의안은 우리측 이행계획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완료된 뒤 제출할 방침이다. WTO 검증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 비준에 실패한 뒤의 상황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수입쌀 국가별 수입 비중



수입 쌀의 50%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연도	합 재고량	수입량	재고량	비율
1988년	552만섬	39만 5000섬	7.1%	
2003년	765만섬	274만 9000섬	36.0%	
2004년	710만섬	340만섬	47.9%	
2005년	1046만섬(예상)	?	?	

◆이행계획서 제출에 앞서 국회비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비준 동의는 조약체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하게 돼 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는 초안이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다.

◆WTO의 검증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큰 틀에서 9개 협상 상대국과 합의를 끝낸 상태이므로 부가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규기자 windsea@soul.co.kr

● 쌀 관세화 유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의무수입량  
2005년 22만5700톤 - 90년 간별로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만16700톤(9.9%)까지 성장

● 소비자 부담  
2005년 의무수입량의 9%, 9년차인 2010년, 30%, 2014년까지 30% 유지

● 이행상황 중간 점검  
11월 5일차인 2009년

● 관세화 진행  
유예기간을 언제까지 관세화시킬지 결정 가능

● 의무수입량 증가율  
2005~2009년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의해 결정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대신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 허용량(TRC)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 2014년 올해의 약 2배인 40만 8700톤으로 확대된다.

# 수입쌀 내년6월부터 시판

## 의무수입량의 10%... 관세화 10년 유예

의무수입량의 10%가 일반 가정용 밥용으로 내년부터 시판된다. 지금까지는 떡·쌀과지 등 가공용으로만 쓰여왔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라도 우리에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관세화(쌀시장 연천개방)로 돌아설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30일 협상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의무수입량 증감 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通報했다. 3개월여 걸친 WTO의

검증이 끝나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1998-99년 국내 쌀 소비량 대비 4% (20만 5000t)였던 의무수입량을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7.96% (40만 8700t)까지 확대하기로 협상국들과 최종 합의했다.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용용 시판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차츰 늘려간 뒤 그 뒤에는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 연장 첫째인 내년에는 22만 5700t이 수입돼 이중 10%인 2257t (1.5만 6500살)의 외국쌀이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팔리게 된다.   
경제논기자 shiang@seoul.co.kr

## “재고쌀 北지원등 모색”

쌀재고량의 48% 수입쌀 차지  
농민실득등 국내협상 더 힘남

정부가 쌀 관세화(쌀시장 연천개방)를 10년간 더 미루기로 미국·중국 등 9개국과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시장을 기존 10년(1995~2004년)에 더해 총 20년 동안 완전 개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받고 있는 필리핀은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게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自評)이다. 2014년에 기준 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7.96% (연간 40만 8700t)까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당초 대부분 협상국들은 기존연도 대비 15%(80만 t) 수준의 증량을 요구했다. 20%(100만 t)선을 요구한 나라도 있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협상국들이 9% 안팎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는 의무수입량을 7.4%까지만 늘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막판까지 절묘하게 협상국들을 설득해 수입량을 7.96%로 늘리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량을 6년간 8%, 1

년간 8%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전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했다는 것은 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입쌀을 북한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터놓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늘어나는 쌀 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쌀 재고량은 710만 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600만 t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수입쌀 재고량이 전체의 47.9%인 340만 t에 달하고 있어 쌀 재고량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실득은 차차해더러도 WTO 검증과정 통과,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협상, 국회 비준 등 아직 세부적인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협상상 결과 발표와 함께 이렇게 계획서 WTO에 제출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풀릴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 WTO의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원 76명은 이달 초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

경제논기자 shiang@seoul.co.kr

## “수입쌀 시판가 국산도매가 수준”

■ 허삼만 농림장관 문답

허삼만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20년간(1995~2014년) 유예받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유예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면서 앞으로 남은 10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수입쌀은 언제,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까.

—시판용 쌀은 포장쌀 형태로 정부대행기관에서 수입해 지역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가격은 국내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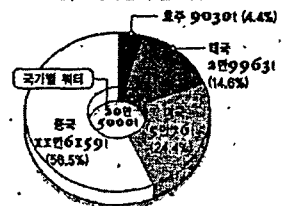
▶대북 쌀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다.

—이번 협상은 대북 지원과 관계가 없다. 늘어나는 수입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원칙적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 대북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국회비준 절차와 비준되지 못할 경우 대책은.

—국회비준 동의안은 우리측 이행계획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완료된 뒤 제출할 방침이다. WTO 검증에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 비준에 실패한 뒤의 상황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수입쌀 국가별 수입 비중



수입 요격률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연도	수입량 (만톤)	수입비율 (%)
1995년	556만	7.1%
2009년	274만 9000	36.0%
2014년	710만	47.9%
2005년	1046만	7

▶이렇게해서 제출에 앞서 국회비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비준 동의는 조약체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는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다.

▶WTO의 검증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나.

—쉽지않은 않았지만 큰 틀에서 9개 협상 상대국과 합의된 측면이어서 무거워진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논기자 wendee@seoul.co.kr

# 수입쌀 내년 6월부터 시판

## 2014년까지 의무수입 7.96%로 확대 확정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이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됐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 쌀 물량이 향후 10년간 두 배로 늘어나고 내년 6월부터 수입쌀의 시중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협상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으며 3개월간의 WTO 검증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이행계획서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A3면

쌀 관세화를 10년간 더 미루는 대가로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 국내 소비의 4%(20만5천t)에서 매년 평균 0.4%포인트씩 상승, 오는 2014년에는 7.96%(40만8천7백t)까지 확대된다. 또 쌀과자 떡 등 가공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이 내년 6월부터 허용되고 시판 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 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균등 증량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도하개발 아젠다(DDA) 협상과 국제 쌀가격, 환율 등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아 쌀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다"며 "10년

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국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dolph@hankyung.com](mailto:dolph@hankyung.com)

# 수입쌀 이르면 6월 소비자시판

정부, 관세화 유예 확정 WTO통보...농민단체 반발

정부는 30일 쌀의 의무수입 물량을 지금의 갑절 수준으로 늘리고 수입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시판하는 조건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연장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경부터 수입쌀이 일반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밥쌀용으로 팔린다. ▶관련기사 4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초부터 9개국과 벌여온 쌀 협상

에서 10년 동안 의무수입 물량을 40만8700t까지 균등히 증량하고, 수입 물량의 10~30%를 밥쌀용으로 소비자에게 시판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화 유예 연장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결과가 불투명하고, 국제 쌀값, 환율 등 변수가 많아 쌀 산업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관세화보다는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관세화 유예 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 변화라고 판단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면으로 이어짐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 <자료:농림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의무수입물량(TRQ-t)	22만5575	24만5922	26만6270	28만6617	30만6964	32만7311	34만7658	36만8006	38만8353	40만8700
TRQ비율(%)	4.397	4.793	5.190	5.586	5.983	6.379	6.776	7.173	7.569	7.966
소비자 시판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시판물량(t)	2만2558	3만4429	4만7929	6만3056	7만9811	9만8193	10만4297	11만0402	11만6506	12만2610

## 수입쌀 이르면 6월 시판

▶1면에서 이어짐

정부는 지난 5월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중국·타이·오스트레일리아·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등 9개국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여, 의무수입 물량을 해마다 일정하게 늘려 10년차인 2014년에는 40만8700만t(1988~90년 국내 쌀소비량 기준 7.96%)까지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수입 물량의 일부를 떡·과자 등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시판하기로 하고, 물량을 2005년 의무수입 물량 22만 5575t의 10%에서 6년차인 2010년까

지 30%로 늘리고,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수입 물량은 모두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영 무역 방식으로 수입된다. 다만, 기존 수입물량(올해 기준 20만5천t)에 대해서는 중국 11만6159t(56.5%), 미국 5만76t(24.4%), 타이 2만9963t(14.6%), 오스트레일리아 9030t(4.4%) 등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확대되는 물량은 국제 자유공개 입찰을 통해 수입된다.

한편,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쌀협상 결과는 농업·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행 계획서 세계무역기구 제출 계획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 ‘10년’ 시간은 벌었는데...

## ■ 정부 쌀협상 최종타결

농민반발 전면 재협상 요구

내년봄 국회비준 진통 예상

쌀 협상에서 정부 협상단이 쌀의 무수입물량을 두배 정도 더 늘려주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받았는데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가 9개국과 협상에 들어가면서 내놓았던 의무수입물량 증량 조건은 7.4%였다.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유·불리가 동등하게 나오는 수치다. 그러나 협상국들은 처음부터 15~20%의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정부 협상단은 끈질긴 설득 끝에 지난 10년간 의무수입물량의 2배에서 조금 빠지는 7.96%로 최종 타결을 이끌어냈다.

협상단은 또 관세화 유예 기간에 언제라도 관세화로 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관세화 전환 때 어떤 추가조건도 덧붙이지 않는다는 합의도 받아냈다. 일본은 8%로 6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뒤 1999년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나머지 2년간 의무수입물량의 절반을 추가로 개방해야 했다.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민간부문 대표로 쌀 협상에 참가해온 김충실 세계무역기구협상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라운드 규정에 비춰보면 (협상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성진근 충북대 교수(농촌경제학)는 "미국·중국이 예초 협상조건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국제 쌀 수급과 가격 등 환경 때문에 우리가 관세화로 가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관세화 유예라는 명분은 얻었는지 몰라도 실리는 얻지 못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쌀협상 유예 협상 일정

1995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협상기간 10년간 무효
2004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협상기간 종료
3월 1일	농림부 기밀부담협정정부 협정 체결
3월 1일	미국·중국·타이·페리소스탈등 11국 협상결과 합의 종료
5월 1일	미국과 타국 협상 종료
5월 1일	협상 상대국과 협정 체결
11월 1일	협상 종료
12월 16일	중국·미국과 협정 체결
12월 16일	협상 종료
12월 30일	정부 쌀 협상 최종 타결

또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 협상이 예초 국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 3월말~4월초께 국회 비준 과정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와 같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적은 양이지만 시중에서 수입쌀이 판매되면 쌀값 하락 등 쌀 산업이 쪼아져야 한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시판될 수입쌀 물량은 10년차인 2014년에 이르러도 전체 소비량의 1%를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입쌀이 시중에 방출되는 만큼 국내 쌀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수입쌀 증가에 따른 재고 부담도 적지 않다. 올해 수입쌀 재고량은 340만 석(49만t)으로 전체 쌀 재고량 710만석(102만t·추정)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쌀 협상에서 제3국 수출 금지 조항을 삭제해 대북 지원이나 재수출 길을 열어 놓았지만, 실제 수입쌀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북한에 원조물량으로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여 백

## Ⅱ . 2004년 12월 사설 · 기고

여 백



《 관련 사실 · 기고 》

- [연합시론] 쌀 협상 후유증 최소화해야<2004. 12. 30, 연합뉴스>
- [사설] 쌀, 이젠 경쟁력 향상이다<2004. 12. 31, 서울신문>
- [사설] 쌀 협상 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2004. 12. 27, 한국경제신문>
- [사설] 쌀 2차 관세화 유예 이후<2004. 12. 31, 국민일보>
- [사설] 개방 이겨낼 농촌대책 서둘러야<2004. 12. 31, 동아일보>
- [사설]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2004. 12. 31, 서울경제신문>
- [사설] 쌀 개방 10년간 추가 유예됐지만<2004. 12. 31, 세계일보>
- [기고] 쌀 협상 편견없이 보자<서진교 쌀·DDA협상대책연구단장, 2004. 12. 31, 매일경제신문, A6면>
- [기고] 쌀 협상, 결과 수용하고 앞날 대비를<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5. 1. 7, 동아일보 A33면>

여 백

2004년 12월 30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 <연합시론> 쌀협상 후유증 최소화해야

(서울= 연합뉴스) 쌀 완전개방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연기할 수 있도록 쌀협상이 타결됐다. 그 대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에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4년에는 7.96%까지 늘어나고 의무수입물량의 시판도 최고 30%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결과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을 계획이며 약 3개월정도 걸리는 WTO 검증이 끝난뒤 국회의 비준을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완전개방만은 피할 수 있게 돼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됐다. 또한 완전개방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우리의 뜻에 따라 완전 개방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아 농민과 국회가 이를 수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데 의무수입물량은 현재의 연간 20만5천t에서 41만t 가까이로 늘어나 2014년에는 연간 소비량의 약 15%가량을 수입물량이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의무수입물량의 시판을 최고 30%까지 허용하기로 해 시판되는 쌀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가량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농민단체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연내에 쌀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재협상이 무리인데다 설사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쌀개방 유예조건을 더 이상 유리하게 결말지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의 마음이 그러하듯 이번에 타결된 쌀개방 추가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좀더 유리하게 타결됐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통상문제가 그렇듯이 쌀 협상도 상대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풀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상팀도 농업의 앞날과 농민들의 어려움을 의식, 쌀 의무수입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협상국을 상대로 막판 안간힘을 쓰지 않았는가.

이제 남은 일은 협상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이다. 여지는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의무수입물량분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하기로 했으므로 입찰을 통해 값싼 저질 쌀을 도입하면 시판하더라도 국산쌀의 경쟁력이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쌀의 북한 등 제3국 수출 허용 문제도 WTO의 결정을 남기고 있어 수출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따라서 국회와 농민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안없는 반대는 파국만을 초래할 뿐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처럼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된다.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 이젠 경쟁력 향상이다

정부가 올 들어 1년간 계속해온 쌀 개방협상을 '관세화 유예'로 마무리함으로써 일단 전면 개방을 최장 10년간 막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오래전부터 쌀의 경쟁력 강화를 그렇게도 외쳐왔건만 국내 쌀산업은 관세화를 바로 시행할 경우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가 관세화 유예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국내 쌀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안도할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쌀 소비량의 4% 수준인 의무수입량이 내년부터 계속 늘어난다. 종전과 달리 일정 수입량이 시장에 바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쌀값을 끌어내리고 현재 1000만섬의 쌀 재고량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쌀이 실제 밥상에 오르는 내년부터 국내 쌀 산업은 본격 시장 개방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개방 파고가 타쳤는데도 아직도 사회 일각에 시장 개방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안타깝다. 더이상 쓸데없는 논의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정치인과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란 정부 협상당국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관세화 유예로 소비자들은 계속 국제가격보다 6~7배나 비싼 값으로 쌀을 사먹게 됐지만 국산 쌀이 더욱 맛있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국산 쌀이 외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에 국산 쌀의 밥맛도 더 높이고 가격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쌀 정책은 품종을 개량하고 대단위 쌀 생산 유도 등을 통해 생산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회, 정부와 농민 단체들은 합심해 쌀 산업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 쌀협상 타결이후가 더 중요하다

미국 중국 등과의 쌀개방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발표만 남았다는 소식이다. 연말까지인 최종 협상 시한을 한주 남겨놓고 있는 정부는 쌀개방을 10년 유예하는 대신 현행 4%인 의무수입물량을 오는 2014년까지 7.9% 안팎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내년 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적용돼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어쩔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DDA협상결과에 따라선 2~3년 안에 쌀시장을 전면 관세화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와 농민단체가 합심해 의무수입물량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쌀시장 완전 개방까지를 대비하는 농업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산 쌀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 자칫 머뭇거리다간 외국쌀이 우리 식탁을 상당 정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쌀의 품질이나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해 정말이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주말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지난 94년 우르파이라운드 이후 10년간 70조원을 농업구조조정 명목으로 투입하고도 농가 빚만 더 늘어나는 등 오히려 농업경쟁력이 추락했다는 말을 듣는 것도 정부가 정치권에 휘둘러서 각종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간 1백19조원을 들여 농촌을 살리겠다는 구상도 제대로 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농촌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민단체들도 더이상 '무조건 반대'만 외쳐선 곤란하다. 쌀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가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쌀값 하락에 따른 직접보상 방안도 마련해 놓은 만큼 이전 농민들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쌀 2차 관세화 유예 이후

쌀 수입 전면 개방이 10년 더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중국 미국 등 9개국과의 쌀 협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30일 쌀시장 추가 개방 관련 이행계획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되 그 대가로 1989~90년의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의무수입물량(TRQ)을 올해 4%에서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7.96%로 늘리고 그중 일부는 내년부터 밥쌀용으로 일반 시판을 허용하게 된다.

당초 목표보다 수입 개방 폭이 커진 것이나 수입쌀 시판 금지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인 협상 시한을 넘기지 않음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협상 결과에 반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정부가 나름대로 협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쌀 관세화를 20년간 유예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당연히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정부가 사실상 관세화 유예를 목표로 함에 따라 협상 카드가 한정돼 있음을 간파한 중국이 막판까지 TRQ 9%, 시판 전면 허용 등 무리한 요구를 했음을 감안하면 그나마 그러한 결과를 끌어낸 것은 치하할 만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관세화 유예 이후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철실하다. 허상만 농림장관의 지적처럼 앞으로 10년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이는 관세화 유예 기간 중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관세화로 바뀔 수 있고 또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데 비추어 더욱 시급한 과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되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 더 이상 쌀만 역류할 수 없음을 불가피한 사실로 인정하고 국내 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에 동참해야 한다.

## 개방 이겨낼 농촌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중국 미국 등 9개국과 벌여온 쌀 관세화(고율관세 부과 수입개방) 유예기간 연장협상을 마무리하고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관세화시기를 10년 더 늦추는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인 의무수입물량을 7.96%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관세화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세화에 대한 농민 반발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협상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 쌀의 소비자 판매가 허용됨으로써 쌀 시장 '빛장'이 풀렸다는 사실이다.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밥쌀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 10%를 시작으로 점차 30%까지 확대된다. 외국 쌀이 일반가정의 식탁을 파고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시장은 빠른 속도로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화 유예가 한시적이라는 사실도 잊아선 안 된

다. 10년 뒤 추가로 관세화를 연장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중도에 우리 스스로 관세화를 선언하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현행 방식보다 관세화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정부는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 떠받치기를 줄이고 생산경쟁력을 높여 국제 쌀값과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의 소득 저하 등 부작용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원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농촌 복지를 내실화함으로써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10년간 농촌과 농업에 지원하기로 한 119조 원의 쓰임새도 철저하게 육성을 가려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농촌의 약성부채로 둔갑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 쌀 관세화유에 연장 이후의 과제

지난 1년간에 걸친 쌀시장 개방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부는 30일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화 유예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에 의무 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대비 4%인 20만 5,000톤에서 7.96%에 해당하는 40만 8,7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입 쌀의 시판 의무물량을 내년에 TRQ의 10%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WTO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도 받을 방침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통해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이끌어낸 것은 일단 국내 쌀 농가 입장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국내 쌀 농가에 미치는 피해와 정부 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환율 등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의무수입물량이 7.5% 이하라야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다음으로 의무수입물량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뒤에도 계속 지켜야 하고 관세율도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관세화로 전환할 때는 낮은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게 WTO의 규정이다. 시장 개방을 늦추는 만큼 유예화의 대가도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유예기간 중 관세화 전환이 가능하도록 컨추리 스케줄을 짚으므로 일본 등의 선례를 거울 삼아 언제 관세화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거의 수용되지 않는 관세화 유예를 얻어 냈는데도 '쌀 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일부 농민 단체들이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한다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 수입량 증가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농사 직불제 확대 등 관련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쌀을 비롯해 농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개방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 쌀개방 10년간 추가유예됐지만

정부가 10년간 쌀시장 개방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대신 현재 4%의 쌀 의무수입물량을 향후 10년 동안 7.9%까지 증량기로 한 쌀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쌀 개방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2배가량이나 늘려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취약한 국내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간 확보와 강력한 농민 반발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무수입물량의 10%를 내년부터 시판한 뒤 2010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당장 내년부터 외국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 국산 쌀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으니 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지난 10년 동안의 농업구조조정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는 그동안 6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농업에 투입했지만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능가부채만 늘어났지 않은가. 앞으로 10

년간 119조원을 투입해서 농촌을 살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세심한 실천전략을 통한 차질없는 추진이 되어 할 것이다.

농민들도 이제 쌀시장 개방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다. 쌀시장 개방은 대체다. 더욱이 우리는 10위권의 무역국가로서 무역의 증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입장이 아닌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과 대만이 이미 쌀시장을 개방하고 자국 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번 허용한 의무수입물량은 쌀시장이 개방돼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오히려 쌀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정부는 개방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정부와 농민은 그동안의 갈등을 넘어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 고



서진교  
쌀·DDA협상대책연구부장

정부는 그 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종합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보의 주요 내용은 2005년부터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약 41만 t의 쌀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이 중 일부는 시중에 방출한다는 것이다.

타국에 비해 좋은 조건

아직 세계무역기구 전체 회원국의 3중절차가 남아 있지만 핵심 이해 당사국인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과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쌀 협상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협상을 잘못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요구를 펼치고 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세화하는 것이 우리 쌀 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위해 더 낫다는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선 이번 쌀협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0년이란 관세화 유예기간 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무역기구에 쌀협상 개시를 통보할 때까지만 해도 유예기간 10년은 우리 목표였다. 비록 쌀 협상이 도하개발어젠더(DDA)와 별개 협상이기는 하나 10년의 유예기간 확보는 도하개발어젠더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고, 앞으로 도하개발어젠더 결과에 따라 이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 쌀 협상 결과는 앞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 8% 저율 관세 수입을 제시하고 있다.

유예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때의 조건도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르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남아 있는 유예기간에도 저율관세 수입량을 늘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99년 유예 도중 관세화를 한 일본도 전환 당시 저율관세 수

입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지금처럼 국가가 쌀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시판 비율도 10%에서 시작해 6년째인 2010년에 30%까지 확대하고, 이후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 좋은 조건인 것만은 틀림없다.

수입쌀 시판 허용 아쉬워

이러한 협상 결과를 놓고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관세화도 하지 않은 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세화란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 특별히 허용된 예외적인 관세화 유예 시한이 종료되었는데도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쌀협상 편견없이 보자

이러한 이유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은 우리나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였고, 협상 상대국들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려해 협상 마지막까지 5년으로 고집하는 가운데 어렵게 일어난 결과물이다.

8%라는 저율관세 수입량에 대한 평가도 다른 나라의 쌀 협상 결과와 우리의 협상 여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0년에 8%라는 유예 대가를 지불했으며, 대만은 2001년 한 해만의 유예 대가로 8%의 저율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이미 관세화된 농산물도 현재는 최소한 5%의 저율관세 수입이 보장돼

입량 7.2%에서 0.4% 늘어 결국 7.6%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 결과는 전환 당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하개발어젠더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예 도중 관세화를 할 경우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6%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물량 30%는 이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유예조건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대만의 쌀 협상에서는 유예 첫 해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으로 저율관세 수입량의 35%가 설정됐다.

이에 비해 이번 쌀협상은 민간이 자

것일까.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 수십 차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재협상을 하자면 과연 이에 응할 나라가 있을까. 그 경우 협상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할 수 없이 관세화하게 된다면 그때 쌀 농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철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여건을 직시하고, 협상 결과를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고



서진교  
쌀·ODA협상대책연구단장

정부는 그 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종합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2005년부터 10년 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약 41만 t의 쌀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이 중 일부는 시중에 방출한다는 것이다.

타국에 비해 좋은 조건

아직 세계무역기구 전체 회원국의 검증절차가 남아 있지만 핵심 이해 당사국인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과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쌀 협상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협상을 잘못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요구를 펼치고 있으며, 다른 일부에서는 이번 기획에 관여한 것이 우리 쌀 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위해 더 낫다는 견해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선 이번 쌀협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0년이란 관세화 유예기간 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무역기구에 쌀협상 개시를 종보할 때까지만 해도 유예기간 10년은 우리 목표였다. 비록 쌀 협상이 도하개발어젠다(DDA)와 별개 협상이기는 하나 10년의 유예기간 확보는 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있고, 앞으로 도하개발어젠다 결과에 따라 이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 쌀 협상 결과는 앞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 8% 저율 관세 수입을 제시하고 있다.

유예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때의 조건도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르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남아 있는 유예기간에도 저율관세 수입량을 늘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99년 유예 도중 관세화를 한 일본도 전환 당시 저율관세 수

입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지금처럼 국가가 쌀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시판 비율도 10%에서 시작해 6년째인 2010년에 30%까지 확대하고, 이후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 사례와 비교하면 분량 좋은 조건인 것만은 틀림없다.

수입쌀 시판 허용 아쉬워

이러한 협상 결과를 놓고 수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관세화도 하지 않은 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세화란 일반 원칙에서 빚이나 특별히 허용된 예외적인 관세화에 시한이 종료되었는데도 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쌀협상 편견없이 보자

이러한 이유에서 10년의 유예기간은 우리나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였고, 협상 상대국들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염려해 협상 마지막까지 5년으로 고집하는 가운데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다.

8%라는 저율관세 수입량에 대한 평가도 다른 나라의 쌀 협상 결과와 우리의 협상 여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0년에 8%라는 유예 대가를 지불했으며, 대만은 2001년 한 해만의 유예 대가로 8%의 저율관세 수입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이미 관세화된 농산물도 현재는 최소한 5%의 저율관세 수입이 보장돼

입량 7.2%에서 0.4% 높아 결국 7.6%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 결과는 전환 당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하개발어젠다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예 도중 관세화를 할 경우 2014년 예상 쌀 수입량은 6% 증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물량 30%는 이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유예조건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대만의 쌀 협상에서는 유예 첫 해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으로 저율관세 수입량의 35%가 설정됐다.

이에 비해 이번 쌀 협상은 민간이 자

것일까.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 수입 차려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재협상을 하자면 과연 이에 응할 나라가 있을까. 그 경우 협상상 대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할 수 없이 관세화하게 된다면 그때 쌀 농가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철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번 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여건을 직시하고, 협상 결과를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쌀협상, 결과 수용하고 앞날 대비를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쌀 협상은 끝났다.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현재의 두 배(41만 t)로 늘리고 이 중 일부를 올해부터 시중에 판매한다는 것이 협상의 골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협상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히 보아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문은 분명히 2004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규정했으므로 그때까지 관세화 유예

에 합의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올해부터 관세화해야 한다. 즉 협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관세화를 의미한다.

일각에는 2004년이 협상시한이 아니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관세화 여부와 관세화 유예 시의 TRQ 증량폭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은 끝나지 않고, 협상이 끝나지 않는 한 TRQ를 늘릴 이유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재협상은 관세화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모험주의적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쌀 수출국들이 재협상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패소해 관세화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협상은 관세화의 위험을 가법계 보

는 관세화론자와 다름없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

관세화론자의 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언젠가 관세화해야 할 것이라면 이번에 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 구조조정이 속명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가격이 높아 관세화하더라도 수입이 안 되거나 아주 적을 것이므로 관세화가 농가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같은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쌀 농업은 100여만 명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들 중 60%는 50세를 넘었고 90%는 40세를 넘어 이미 전직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면 수입이 급증해 농가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재정을 쏟아붓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관세화

론도, 재협상론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쌀협상은 끝났다. 모두 협상결과를 수용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자. 농민단체도 농가에 실익이 있는 쟁점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입될 소득보전직접제가 농가소득의 확실한 안정장치가 되게 하고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안이 골몰하자. 수입쌀과 우리 쌀이 나란히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우리 쌀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가격이 매년 소폭 하락해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줄어 관세화할 때를 대비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관세화 유예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 훗날 혹독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쌀협상, 결과 수용하고 앞날 대비를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쌀 협상은 끝났다.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저율관세수입량(TRQ)을 현재의 두 배(41만 t)로 늘리고 이 중 일부를 올해부터 시중에 판매한다는 것이 협상의 골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협상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냉철히 보아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문은 분명히 2004년 말을 협상시한으로 규정했으므로 그때까지 관세화 유예

에 합의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올해부터 관세화해야 한다. 즉 협상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관세화를 의미한다.

일각에는 2004년이 협상시한이 아니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관세화 여부와 관세화 유예 시의 TRQ 증량폭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은 끝나지 않고, 협상이 끝나지 않는 한 TRQ를 늘릴 이유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재협상은 관세화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모험주의적 입장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쌀 수출국들이 재협상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패소해 관세화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협상은 관세화의 위험을 가늠해 보

는 관세화론자와 다름없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

관세화론자의 논거는 두 가지다. 첫째는 언젠가 관세화해야 할 것이 라면 이번에 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농업 구조조정이 숙명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는 국제가격이 높아 관세화하더라도 수입이 안 되거나 아주 적을 것이므로 관세화가 농가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같은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쌀 농업은 100여만 명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들 중 60%는 50세를 넘었고 90%는 40세를 넘어 이미 전직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면 수입이 급증해 농가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재정을 쏟아 붓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관세화

론도, 재협상론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쌀협상은 끝났다. 모두 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자. 농민단체도 농가에 실익이 있는 쟁점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입될 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의 확실한 안정장치가 되게 하고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안에 골몰하자. 수입쌀과 우리 쌀이 나란히 시장에 나왔을 때 소비자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우리 쌀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가격이 매년 소폭 하락해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국제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 때 관세화할 때를 대비토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관세화 유예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 훗날 혹독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 Ⅲ. 국정조사 이전 기사·기고('05년 4~5월)

여 백



— 《 관련 기사 · 기고 》 —

- [기고] ‘쌀협상 이면합의’ 따져보자<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2005. 4. 27, 문화일보 30면>
- [기고]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2005. 4. 28, 한겨레 21면>
- [기고] 쌀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2005. 5. 12, 한국일보 34면>
- [기자수첩] ‘쌀 협상 오간 말’ 공개하는 나라<이진석 조선일보 경제부, 2005. 5. 13, 조선일보 A3면>
- [기고] 쌀 협상 국정조사에 바란다<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5. 5. 26, 문화일보 38면>

여 백



기고

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 ‘쌀협상 이면합의’ 따져보자

■ 우리나라는 작년말 협상 상대국들과 실질적인 쌀 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올해 초부터 3개월간 WTO 검증이 진행됐고, 지난 12일 최종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0년에 이어 앞으로 10년간 더 쌀에 대한 관세화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WTO 검증완료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쌀 협상 상대국들에 사과·배·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검역상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하고 유채유 등의 관세율을 내리기로 한 부가적 합의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쌀 협상에 대한 이면합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이면합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쌀 협상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 양자간 통상 분야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국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요구해 왔던 양자 현안들을 거론하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국은 WTO 관세화 원칙에서 벗어난 유예를 10년간 해 왔고, 이제 또 유예를 연장받기 위해 협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WTO 농업협정문은 원칙에서 벗어난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대국들에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에는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양자 현안도 포함된다는 것이 상대국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쌀 협상은 쌀에 대한 협상이므로 다른 품목의 양자 현안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최종 합의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예를 들면, 검역 문제는 검역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논의하는 별도 채널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추가적인 양보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협상상황 및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과정에서 상대국들이 검역 등 다른 양자 현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쌀 협상과 분리하여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러한 협상 내부적인 사실의 공표는 협상전략 측면에서는 손실이 크지만 국민에게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또 작년 12월 30일 쌀 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만약 정부가 이처럼 정제된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러 협상 상대국들과 쌀 이외 품목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면 지난 3개월간의 검증기간에 148개 WTO 회원국들은 한국의 쌀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협의를 요구해 왔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사이드 레터(side letter)’라는 형식으로 양국 합의문 귀퉁이에 협상대표가 이름의 이니셜만 간단하게 사인하는 그런 합의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에서 정부는 모든 협상문을 협상대표가 정식 서명한 서한문으로 교환했거나 주재국 한국대사가 서명한 정식 외교문서로 작성했다. 모두가 냉정을 갖고 쌀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침착하게 고민해 보는 노력이 아쉽다.



기고

정일정 농림부 농업협상공장

# '쌀협상 이면합의' 따져보자

■ 우리나라는 작년말 협상 상대국들과 실질적인 쌀 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올해 초부터 3개월간 WTO 검증이 진행됐고, 지난 12일 최종 확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0년에 이어 앞으로 10년간 더 쌀에 대한 관세화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WTO 검증완료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면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쌀 협상 상대국들에 사과·배·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검역상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하고 유채유 등의 관세율을 내리기로 한 부가적 합의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쌀 협상에 대한 이면합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이면합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쌀 협상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 양자간 통상 분야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국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요구해 왔던 양자 현안들을 거론하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한국은 WTO 관세화 원칙에서 벗어난 유예를 10년간 해 왔고, 이제 또 유예를 연장받기 위해 협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WTO 농업협정문은 원칙에서 벗어난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대국들에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보에는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양자 현안도 포함된다는 것이 상대국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쌀 협상은 쌀에 대한 협상이므로 다른 품목의 양자 현안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최종 합의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예를 들면, 검역 문제는 검역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논의하는 별도 채널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추가적인 양보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협상상황 및 전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공정에서 상대국들이 검역 등 다른 양자 현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쌀 협상과 분리하여 별도로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러한 협상 내부적인 사실의 공표는 협상전략 측면에서는 손실이 크지만 국민에게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 또 작년 12월 30일 쌀 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민약 정부가 이처럼 정제된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여러 협상 상대국들과 쌀 이외 품목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면 지난 3개월간의 검증기간에 148개 WTO 회원국들은 한국의 쌀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협의를 요구해 왔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사이드 레터(side letter)'라는 형식으로 양국 합의문 귀퉁이에 협상대표가 이문의 이니셜만 간단하게 사인하는 그런 합의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쌀 협상에서 정부는 모든 협상문을 협상대표가 정식 서명한 서한문으로 교환했거나 주재국 한국대사가 서명한 정식 외교문서로 작성했다. 모두가 냉정을 찾고 쌀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침착하게 고민해 보는 노력이 아쉽다.

##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

정일정/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최근 정부의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중국 등 협상 상대국들이 추가적인 부가합의를 해줬다는 비판과 지적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치 <한겨레> 3면 '다른 합의 없다더니 중국에 뒷문개방'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같은 차원에서 제기되어, 이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하고자 한다.

쌀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우리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도록 돼 있다. 이때 상대국 요구사항이 쌀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상대국들은 다양한 양자 현안 해결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쌀 협상 기간 내내 농민 단체, 언론 등에 상대국들이 검역 등 양자 현안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양자 협의 경로를 통해 이를 논의하는 태도로 우리 쪽이 대응하고 있음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30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의 검증기간에 협의를 계속하여 나리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임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면합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중국산 사과, 배 검역문제처럼 구체적인 내용의 내용을 정부가 당시에는 왜 소상히 밝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협상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의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달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어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서는 농업인, 농민 단체가 열망하여 왔던 10년 추가 관세화 유예라는 쌀 협상 결과를 무역기구 검증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는 어느 나라의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쌀 이외 품목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의 추가 요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과정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부가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정제된 문구로밖에 발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부가적 협의사항 중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사과·배에 대해 검역상 수입위험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은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도하게 늦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검역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수입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쌀이 우리 농업과 한국인의 정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당시 협상 정황과 부가적 협의사항의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이 쌀 협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특기고



백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정부는 4월12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으로부터 쌀 협상 결과가 당초 사무국에 제출한대로 확정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작년 한 해 9개국과 50여 차례 협상을 했고 그 결과 12월30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제출했던 이행계획서 내용 중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수정안은 회원국 검증 등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쌀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이런합의를 했다'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해가 증폭되고 급기야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러 왔다. 이러한 오해가 촉발되고 불신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쌀 관세화 유예를 확보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쌀 이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고 했

## 쌀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합의가 있었느냐,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30일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분명히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장점별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것은 협상 내용은 대부분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발언 내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그 단계에서 책임있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농민들이나 국민들 보기에는 발표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협상을 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정부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둘째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9개국과 협상을 하면서 쌀 이외 다른 품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상대방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대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밖에 없고 더구나 유예기간을 10년 더 연장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협상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금 당장 도 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우리가 협상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인정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협상의 기본원리를 깊이 머리 속에 넣고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5-112-134

### 추기고



백종하  
농림부 국장

정부는 4월12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으로부터 쌀 협상 결과가 당초 사무국에 제출한대로 확정됐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작년 한 해 9개국과 50여 차례 협상을 했고 그 결과 12월30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제출했던 이행계획서 내용 중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수정안은 회원국 견증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그런데 쌀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이면합의를 했다'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해가 증폭되고 급기야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러 왔다. 이러한 오해가 촉발되고 불신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달라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쌀 관세화 유예를 확보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민들은 쌀 이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다고 했

## 쌀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합의가 있었느냐,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30일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분명히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 양자 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장점별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것은 협상 내용은 대부분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발언 내용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며 그 결과 그 단계에서 책임있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농민들이나 국민들 보기에 발표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협상을 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정부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둘째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9개국과 협상을 하면서 쌀 이외 다른 품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상대방은 우리가 풀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대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밖에 없고 더구나 유예기간을 10년 더 연장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는 어느 협상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금 당장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우리가 협상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임을 인정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얻어진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협상의 기본원리를 깊이 머리 속에 넣고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다 함께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 ‘쌀협상 오간 말’ 공개하는 나라

이진석·경제부  
(블로그)island.chosun.com

“미국·태국·파키스탄 협상팀들이 걱정입니다”  
쌀 협상 국정조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농림부의 한 간부는 연방 남의 나라 협상팀 걱정을 늘어놓았다. 쌀 협상팀 핵심 멤버라서 ‘제 코가 석자’인 처지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질 않았다.

“왜 그 나라들과는 별다른 부가합의가 없는지 압니까? 협상팀들이 선선히 물러섰거든요.”

그래서였는지 한국과의 쌀 협상에서 미국과 태국은 중국·인도·아르헨티나와 달리 관세나 검역 등에서 따로 챙겨간 것이 없다. 파키스탄은 “수요가 있으면 특수 용도 쌀을 소량 구매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아갔다.

“국정조사하면 결국 협상 과정을 다 까발릴 테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우리 입장을 받아준 나라의 협상팀들은 자기 나라에서 코너에 몰릴 겁니다.” 남 걱정할 형편이 아니지 않냐고 핀잔을 주려는데, 잠

시 끊어졌던 말이 이어졌다.

“그 협상팀들 다시 만납니다. 올여름부터 도하개발 아젠다(DDA)에 따른 농산물 개방 협상이 본격화되니까요. 가만있겠습니까. 딴 나라들도 ‘한국은 협상 과정이 공개되는 나라니, 뒷탈이 없으려면 무조건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협상이 되겠습니까”

듣고 나니 남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국정조사로 쌀 협상 과정이 공개된 뒤 돌아올 ‘부메랑’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미국 등 3개국의 협상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과정 공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말도 했다.

국제협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통째로 공개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릎을 맞대고 나눈 얘기를 떠벌리는 사람을 누가 신용하겠는가. 쌀 협상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제협상이 아니다.





## ‘쌀협상 오간 말’ 공개하는 나라

이진석·경제부  
(블로그)island.chosun.com

“미국·태국·파키스탄 협상팀들이 걱정입니다”

쌀 협상 국정조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농림부의 한 간부는 연방 남의 나라 협상팀 걱정을 늘어놓았다. 쌀 협상팀 핵심 멤버라서 ‘제 코가 석자’인 처지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질 않았다.

“왜 그 나라들과는 별다른 부가합의가 없는지 압니까? 협상팀들이 선선히 물러섰거든요.”

그래서였는지 한국과의 쌀 협상에서 미국과 태국은 중국·인도·아르헨티나와 달리 관세나 검역 등에서 따로 쟁겨간 것이 없다. 파키스탄은 “수요가 있으면 특수 용도 쌀을 소량 구매해주겠다”는 약속만 받아갔다.

“국정조사하면 결국 협상 과정을 다 까발릴 테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우리 입장을 받아준 나라의 협상팀들은 자기 나라에서 코너에 몰릴 겁니다.” 남 걱정할 형편이 아니지 않냐고 핀잔을 주려는데, 잠

시 끊어졌던 말이 이어졌다.

“그 협상팀들 다시 만납니다. 읍여름부터 도하개발 아젠다(DDA)에 따른 농산물 개방 협상이 본격화되니까요. 가만있겠습니까. 딴 나라들도 ‘한국은 협상 과정이 공개되는 나라니, 뒷탈이 없으려면 무조건 세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협상이 되겠습니까”

듣고 나니 남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 국정조사로 쌀 협상 과정이 공개된 뒤 돌아올 ‘부메랑’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미국 등 3개국의 협상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과정 공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말도 했다.

국제협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면서 주고받은 말들이 통째로 공개되는 것은 곤란하다. 무릎을 맞대고 나눈 얘기를 떠벌리는 사람을 누가 신용하겠는가. 쌀 협상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제협상이 아니다.



기고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쌀협상 국정조사에 바란다

■ 지난 4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결과를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던 일체의 시선들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비준을 앞둔 지금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국한돼야 한다.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자칫 도하개발어젠다(DDA)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절대 명제가 난관에 부딪칠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로 인해 국정조사 상대국과의 협상과정도 공개되고 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하나만 보고 들은 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어쨌든 쌀협상에서 어떤 협상이 국익에 유리할지 현재의 결과로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다만, 농민들이 조사를 요구한 것은 현실적 요청에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장점을 지닌 반면 개인과 조직, 사회와 국가에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켜 이를 증폭시키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쌀협상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는 우리 농업의 역사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협상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작목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농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협상 상대국과의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진실과 이면합의 사항을 소상히 밝혀 쌀생산 능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대한 예상피

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솔직히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주는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 협상 행태에 변화를 주고 앞으로 DDA협상이나 국가별 또는 대륙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도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또는 협상결과를 받아들 때 또다시 국익을 핑계로 농촌을 포기하거나 생산자인 농민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은 특성으로 보아 협상전문가의 몫이 분명하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제외한 협상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 그래도 농업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권리는 우리 농민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책으로 인한 대가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무엇인가와 교환하는 형식을 관행화해 왔다. 그렇지만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은 반드시 도입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되 미래 지향적인 결과나 나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협상을 놓고 '발목잡기' 식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안 할만 못한 조사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비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화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적어도 앞으로 있을 개도국 지위 유지 협상의 상대국을 자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더 이상의 이면합의가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농민출신 장관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기고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쌀협상 국정조사에 바란다

■ 지난 4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쌀협상 결과를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던 일체의 시선들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비준을 앞둔 지금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의 오류를 찾아내는 데 국한돼야 한다.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자칫 도하개발어젠다(DDA)개도국 지위 유지라는 절대 명제가 난관에 부딪칠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로 인해 국정조사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이 공개되고 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하나만 보고 들은 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어쨌든 쌀협상에서 어떤 협상이 국익에 유리할지 현재의 결과로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다만, 농민들이 조사를 요구한 것은 현실적 요청에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장점을 지닌 반면 개인과 조직, 사회와 국가에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켜 이를 증폭시키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쌀협상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는 우리 농업의 역사를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협상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작목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농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협상 상대국과의 쟁점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진실과 이면합의 사항을 소상히 밝혀 쌀생산 농가의 소득감소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 대한 예상피

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솔직히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주는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부 협상 행태에 변화를 주고 앞으로 DDA협상이나 국가별 또는 대륙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도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또는 협상결과를 받아들 때 또다시 국익을 핑계로 농촌을 포기하거나 생산자인 농민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은 특성으로 보아 협상전문가의 몫이 분명하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제외한 협상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을 늘리고 있다. 그래도 농업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에 대비한 충분한 정책이 동원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권리는 우리 농민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책으로 인한 대가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무엇인가와 교환하는 형식을 관행화해 왔다. 그렇지만 필요한 정책이나 법률은 반드시 도입되거나 개정돼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되 미래 지향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협상을 놓고 발목잡기 식으로 흐른다면 오히려 안할만 못한 조사가 될 것이다. 아울러 비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화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적어도 앞으로 있을 개도국 지위 유지 협상의 상대국을 자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더 이상의 이면합의가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농민출신 장관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여 백

## **IV. 국정조사 이후 기사·사설('05년 6월)**

여 백

## 《 관련 기사 · 사실 》

- **쌀 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무산 안팎**<2005. 6. 15, 연합뉴스>
  - 결론 제각각...비준동의안 처리도 이견
- **쌀 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6, 국민일보 4면>
  - 與野 ‘이면합의’ 신경전...월말 국회비준 불투명
- **쌀 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무산**<2005. 6. 16, 내일신문 2면>
- **쌀 협상 國調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6, 동아일보 A8면>
  - 與野 “이면합의” “부가합의” 대치...비준 난항예고, 한나라 “허상만 前장관 위증죄로 고발할 것”
- **與野 이견에 ‘쌀 국조특위’ 단일보고서 실패**<2005. 6. 16, 서울경제신문 7면>
  -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 [時論] **할리우드 액션**<이신우 논설위원, 2005. 6. 17, 문화일보 30면>
- [테마진단] **안타까운 쌀 협상 국정조사**<박노형 고려대 법대교수, 2005. 6. 17, 매일경제신문 6면>
- [사설] **쌀 수입 조기관세화 검토해야**<2005. 6. 16, 제일경제 2면>
- [사설] **쌀 협상 비준동의안 가결해야**<2005. 6. 16, 국민일보 22면>
- **쌀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2005. 6. 15, 연합뉴스>
  - 35일간 활동 종료...비준연기론 대두
- [사설]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과 답답한 우리의 현실**<2005. 6. 22, 경향신문 31면>
- [사설] **지금 농민이 정부와 맞설 때인가**<2005. 6. 22, 중앙일보 34면>

여 백



2005년 06월 15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쌀협상 국조 보고서 채택 무산 안팎>(종합)

결론 제각각..비준동의안 처리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회 `쌀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35일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갈려 조사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여야 간사인 우리당 신중식(申仲植),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이 사전 입장조율을 위한 간사회의를 제안하며 정회를 요구하고 나서 곧바로 회의가 중단됐다.

양당 간사회의에서 우리당은 쌀협상 과정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허상만(許祥萬) 전 농림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명수 농림차관 등에 대한 정부의 문책을 요구, 우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협상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는 농민 분노를 사전에 막으려는 방어조치로 해석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자체 결과보고서에서 "이번 협상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원본을 열람한 결과 정부의 발표 및 보고 내용 외에 별도 이면합의는 없었다"면서 "미국 쌀협상과 쇠고기 수입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한.미간 별도 합의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는 쌀협상만 한다고 밝혔을 뿐 단 한차례도 부가합의에 대해 미리 밝히지 않은 만큼 이는 국민을 호도한 이면합의"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측의 쌀 시장점유율 25% 보장 요구에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등 이면합의 의혹이 있는데다 5년 뒤 정부의 이행계획서 중간 점검을 받게돼 실질적으로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10년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은 "농민과 농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비준 여부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분석한 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방호 의원은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안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처럼 쌀 국조특위 차원의 단일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각당은 자체 국정조사 보고서를 내기로 하고,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 등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굳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는 실패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보고서 채택 실패

與野 '이면합의' 신경전... 월말 국회비준 불투명

## 쌀협상 국조특위 전체회의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쌀협상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부가합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정부가 부인하고 있고, 협상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야는 특히 정부의 쌀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면합의 유무' 내용을 보고서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특위 여당간사인 우리당 신중식 의원은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특위 활동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고,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면합의 의혹과 정부협상 실패를 강하게 제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은폐 사실을 부인하고 이면합의가 아닌 부가합의 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국정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자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며, 전형적인 밀실협상의 대표적 사례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간 입장차이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기로 한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우리당은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에 기존 농어업대책 외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농가 피해에 대한 예상분석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정부 재협상 요구와 함께 정부가 재협상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농민단체 등과 함께 비준동의에 결사 반대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박재찬기자 jeep@kmib.co.kr

내 일 상 글  
6月16日 函

# 쌀협상 국조 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쌀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35일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크게 갈려 조사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양당 간사회의에서 우리당은 쌀협상 과정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주장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허삼만 전 농림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명수 농림 차관 등에 대한 정부의 문책을 요구, 우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한나라당은 "농민과 농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비준 여부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분석한 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방호 의원은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안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비준동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쌀협상 國調보고서 채택 무산

## 특위 어제 활동종료

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허상만(許祥萬) 전 농림부 장관을 국회법위반(위중)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李方鎭) 의원은 15일 "국회 속기록에는 허 전 장관이 쌀과 중국산 사과, 배가 연계돼 있다고 언급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도 허 전 장관이 13, 14일 청문회에서 계속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 "이면합의" "부가합의" 대치... 비준 난항 예고 한나라 "허상만 前장관 위중죄로 고발할 것"

위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의 3분의 1만 서명하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특위위원 12명 중 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위는 이날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지만 이면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

갈려 단일안 채택에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면합의"라며 비준 거부를 내세운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가합의였고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했다.

결국 특위는 김원기(金元基) 국회 의장에게 단일 보고서를 채택해 보고하는 대신 당별로 결과를 보고해 당론을 정하기로 하고 활동을 종료

했다. 이에 따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진풍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은 시한에 쫓겨 상대 국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실패한 협상"이라며 비준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쌀 국정조사를 추진한 농촌 출신 의원 6명도 이날 6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은 기자. lghlee@donga.com



한화갑(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발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 與野 이견에 '쌀 국조특위' 단일보고서 실패

#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 “정쟁수단 전략” 비난

이면합의 논란으로 추진된 ‘쌀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간 입장차로 단일보고서 마련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쳤다. 국정조사 특위가 단일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은 이례적으로 특위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특위는 각당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하며 교섭단체 간 사들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차

원의 보고서 채택 대신 각 당별로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 역시 관세화유에 연장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가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자합의 사항은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체결한 이면합의가 명백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협상 책임자 및 은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위증협의를 고발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명수 농림부 차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행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연말께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쌀 협상에 따른 농가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하자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기기자 skde@sed.co.kr



한화갑(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쌀협상 국외비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발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 與野 이견에 ‘쌀 국조특위’ 단일보고서 실패

#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져

### “정쟁수단 전락” 비난

이면합의 논란으로 추진된 ‘쌀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간 입장차로 단일보고서 마련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쳤다. 국정조사 특위가 단일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은 이래적으론 특위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특위는 각당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화하며 교섭단체 간 사들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차

원의 보고서 채택 대신 각 당별로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쌀이 품목에 대한 양보 역시 관세화유에 연장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가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자합의 사항은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체결한 이면합의가 명백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협상 책임자 및 은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위중협외의 고발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명수 농림부 차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도하개발어젠다(ODA) 협상 진행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연말께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쌀 협상에 따른 농가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하자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기기자 sktee@sed.co.kr

■ 얼마전 농림부 및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을 때였다. 한 참석자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쌀관세화 유예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설명이 끝난 후 그에게 질문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본인의 평가다. 개인적으로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중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질문의 초점을 피한 채 정부의 견해를 반복했다. 재차 개인적 판단을 물었다. 역시 일반론이 돌아올 뿐이었다. 농업경제학 자로서의 시적 입장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만일 자신의 견해가 관세화유예였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마 일부러라도 관세화유예라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가 끝내 답변을 피한 채 정부의 공식 결정만 반복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지레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장개방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다만 어느 누구도 감히 관세화나 시장개방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은 농민이나 국민감정에 대한 우



時論

이신우  
논설위원

할리우드 액션

러 때문이었다.

이렇게 농림부나 외교부 통상협상팀은 처음부터 관세화유예 이외의 어떤 대안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무엇이 낫고 못한지를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쌀협상은 어차피 처음부터 한쪽 팔을 묶어둔 채 쌀 수출국들과 싸움을 벌인 꼴이다. 이런 주변 상황을 감안한다면 협상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 몇가지 '이면합의' 내지 '부가합의'가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마저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가운데 일부가 쌀협상 결과에 증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의 비준 거부 발언에 이를 지켜보던 필자는 "어허라?"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좋다. 비준 부결로 간다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비준이 안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상 쌀협상에서의 관세화유예는 어차피 전세계에서 한국과 필리핀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비준이 거부되면 지난 10년의 유예기간은 2004년말로 종료되고 만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효될 수밖에 없다. 그냥 관세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사회는 뜻하지 않게 국제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세계 쌀생산국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 하긴 좋은 점도 있다. 치열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우리 농촌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않아도 지난 10년간 무려 60조원의 농촌지원금을 받고도 경쟁력 강화에 철저히 실패했다는 비판을 들어오지 않았는가. 게다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갈수록 앞으로 농촌에 쏟아부어질 110조원의 국가부담이 줄어드는 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관세화, 즉 시장개방과 함께 농민단체들도 어반거화에 정선차라야 한다. 기업이나 도시 화이트칼라들이 얼마나 쉽게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를 헤쳐가는지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비준이 부결될 경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걸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비준 거부를 떠먹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로 비준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어차피 통과될 바에야 최대한 농민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각인해 놓자는 게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시쳇말로 '할리우드 액션'인 셈이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이라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보기에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확고하게 비준 거부를 밀어붙여야 한다.

정말 그럴 자신 있는가.



■ 얼마전 농림부및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을 때였다. 한 참석자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쌀관세화 유예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설명이 끝난 후 그에게 질문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본인의 평가다. 개인적으로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중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직통의 초점을 피한 채 정부의 견해를 반복했다. 제차 개인적 판단을 물었다. 역시 일반론이 돌아올 뿐이었다. 농업경제학자로서의 사적 입장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 만일 자신의 견해가 관세화유예였더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마 일부러라도 관세화유예라고 강조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을 것이다. 그가 끝내 답변을 피한 채 정부의 공식 결정을 반복하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저러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장개방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다만 어느 누구도 감히 관세화나 시장개방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은 것은 농민이나 국민감정에 대한 우



時論

이신우  
논설위원

## 할리우드 액션

러 때문이었다.

이렇게 농림부나 외교부 통상협상팀은 처음부터 관세화유예 이외의 어떤 대안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 무엇이 낫고 못한지를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쌀협상은 어차피 처음부터 한쪽 팔을 묶어둔 채 쌀 수출국들과 싸움을 벌인 꼴이다. 이런 주변 상황을 감안한다면 협상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 몇가지 '이면합의' 내지 '부가합의'가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에서 말뚝을 빚고 있으나 이마저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쌀협상 결과에 증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의 비준 거부 발언에 이를 지켜보던 필자는 "어허라?"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좋다. 비준 부결로 간다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

비준이 안되면 그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상 쌀협상에서의 관세화유예는 어차피 전세계에서 한국과 필리핀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비준이 거부되면 지난 10년의 유예기간은 2004년말로 종료되고 만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효될 수밖에 없다. 그냥 관세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사회는 뜻하지 않게 국제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세계 쌀 생산국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 나가야 한다. 하긴 좋은 점도 있다. 치열한 가격 및 품질경쟁을 통해

우리 농촌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도 지난 10년간 무려 60조원의 농촌지원금을 받고도 경쟁력 강화에 활저히 실패했다는 비판을 들어오지 않았는가. 게다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갈수록 앞으로 농촌에 쏟아부어질 110조원의 국가부담이 줄어드는 가외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관세화, 즉 시장개방과 함께 농민단체들도 어떤 기획에 정신차려야 한다. 기업이나 도시 화이트칼라들이 얼마나 쉽게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글로벌 경쟁 시대를 헤쳐가는지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비준이 부결될 경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걸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비준 거부를 들먹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로 비준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어차피 통과될 비어야 최대한 농민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각인해 놓자는 게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시쳇말로 '할리우드 액션'인 셈이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이라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보기에도 좋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화끈하게 비준 거부를 밀어붙이든지해야 한다.

정말 그럴 자신 있는가.

# 안타까운 쌀협상 국정조사

## 테마진단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2004년 이뤄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협상의 이면합의 등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쌀협상국정조사특위가 35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조사특위의 왕성한 활동에 불구하고 소위 이면합의에 대한 여야간 견해 차이로 단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법과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번 쌀협상의 분명한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극적으로 허용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2005년부터 10년 간 계속 연장하는 것이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이번 쌀협상은 2004년에 개시되어 종료되어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계속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농민단체 등은 대체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국 2014년까지 10년 기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허용받는데 성공하였다.

### 관세화 유예 평가해야

이번 쌀협상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사과 등의 검역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력의 언급이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농민단체는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내지 국회의 비준동의의 반대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허용받기 위해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양보)'를

주도록 요구받았다. 쌀 관세화유예라는 예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관련 국가들에 무엇인가 양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노력을 약속한 것인데 이것이 이면합의라는 주장이다.

검역절차는 WTO의 검역(SPS)협정에 의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검역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은 엄밀하게 위에서 말하는 '양허(양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허는 일반적으로 관세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방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쌀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이들 추가적인 내용은 쌀의 관세화유예라는 예외를 허용받기 위해 부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이번 쌀협상이 '밀실협상'이라며 협상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은 기본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며 따라서 비밀협상

이 기본이다. 개인간 기업간은 물론 정부간 협상도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협상 중에는 기업든 정부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협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미국이 일정한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WTO 법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유념하겠다는 정도의 외교적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미국은 물론 조그만 국가라도 협상에서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상은 그림 그리기에 비유할 수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림이 완성되면 이런 밑그림은 숨겨지는 것이다. 협상 진행중에 서로 오고가는 대화를 놓고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리이다.

쌀협상 국정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5일이라는 긴 시간을 투입하고서도 4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30여 인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를 동안 꼬박 불러 놓고서도 특위의 단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쌀협상 결과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연기 또는 반대하지는 주장도 안타깝다. 한국이 원하여 어렵게 얻은 협상의 결과를, 그 결과도 한국이 원하였던 내용인데 거부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참으로 알 수 없는 한국이라는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협상공개 국제신뢰 타격

협상 차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면합의 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위 위원과 관련 조사위원회 의하여 외국과의 협상내용은 물론 정부의 대외전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일부 공개된 것이다.

협상은 그 성격상 비밀이며 특히 정부간 협상은 민감하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은 비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선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과연 어느 외국정부가 한국과 성실하게 속 깊은 협상을 할지 크게 걱정된다.

이번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통상부나 농림부가 잘못된 협상을 하였다고 야단만 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 9개 국가와 어려운 협상을 수행하고 148개 전체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느라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쌀협상이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에서 좋은 자극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안타까운 쌀협상 국정조사

## 테마진단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2004년 이뤄진 쌀에 대한 관세화유 협상의 이면합의 등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쌀협상국정조사특위가 35일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조사특위의 왕성한 활동에 불구하고 소위 이면합의에 대한 여야간 견해 차이로 단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법과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번 쌀협상의 분명한 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극적으로 허용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2005년부터 10년 간 계속 연장하는 것이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이번 쌀협상은 2004년에 개시되어 종료되어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계속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지만 농민단체 등은 대체로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국 2014년까지 10년 기간 쌀에 대한 관세화유예를 허용받는 데 성공하였다.

### 관세화 유예 평가해야

이번 쌀협상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사과 등의 검역절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 노력의 언급이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과 농민단체는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며, 재협상 내지 국회의 비준동의 반대를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허용받기 위해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양보)'를

주도록 요구받았다. 쌀 관세화유예라는 예외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관련 국가들에 무엇인가 양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노력을 약속한 것인데 이것이 이면합의라는 주장이다.

검역절차는 WTO의 검역(SPS)협정에 의해 과학적 증거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검역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은 엄밀하게 위에서 말하는 '양허(양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허는 일반적으로 관세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방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쌀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이들 추가적인 내용은 쌀의 관세화유예라는 예외를 허용받기 위해 부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야당과 농민단체 등은 이번 쌀협상이 '밀실협상'이라며 협상의 잘못을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은 기본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며 따라서 비밀협상

이 기본이다. 개인간 기업간은 물론 정부간 협상도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협상 중에는 기업은 정부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협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미국이 일정한 시장점유율 보장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WTO 법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단지 유념하겠다는 정도의 외교적 대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미국은 물론 조그만 국가라도 협상에서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상은 그림 그리기에 비유할 수 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림이 완성되면 이런 밑그림은 숨겨지는 것이다. 협상 진행중 서로 오고가는 대화들을 놓고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리이다.

쌀협상 국정조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5일이라는 긴 시간을 투입하고서도 4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30여 인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틀 동안 꼬박 불러 놓고서도 특위의 단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그리고 쌀협상 결과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연기 또는 반대하는 주장도 안타깝다. 한국이 원하여 어렵게 얻은 협상의 결과를, 그 결과도 한국이 원하였던 내용인데 거부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참으로 알 수 없는 한국이라는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 협상공개 국제신뢰 타격

협상 차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면합의 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위 위원과 관련 조사위원회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상내용은 물론 정부의 대외전문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일부 공개된 것이다.

협상은 그 성격상 비밀이며 특히 정부간 협상은 민감하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고받은 비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선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과연 어느 외국정부가 한국과 성실하게 속 깊은 협상을 할지 크게 걱정된다.

이번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외교통상부나 농림부가 잘못된 협상을 하였다고 아단만 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 9개 국가와 어려운 협상을 수행하고 148개 전체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느라 큰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쌀협상이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에서 좋은 자극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쌀수입 조기관세화 검토해야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실태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별무소득인 채 끝났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쌀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사과, 배, 가금육, 오렌지 등이 포함된 것이 부가합의나, 이면합의나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담초 쌀협상이 끝난후 정부발표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돼 오던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으나 제기된 의혹을 속 시원히 규명하지 못한채 끝났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아니면 하는 의혹은 그대로 남았고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청문회에서는 또 수입쌀 가운데 미국 쌀 점유율을 50%로 하는데 노력키로 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당시 정부가 미국쌀 50% 점유율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를 해준바 있고 미국이 압박을 가하자 정부는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쌀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한 협상이 상당히 구차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하겠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정부는 부가합의라고 강변하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쌀협상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해괴한 계산법도 등장했다. 식량원조용으로 구매키로 한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은 의무수입물량(MMA)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법

이다.

분명 우리돈으로 사들이는 것임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수입물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고 금색하기 아물데 없다.

한국 통상외교의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정황이 쌀협상에 집약된듯 하다. 세계 모든 나라가 쌀관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마당에 세계무역기구(WTO) 148개 회원국중 유일하게 관세화 유예를 채택하다 보니 정부 통상외교팀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협상상대국들은 관세화 유예라는 큰 약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고 국내에서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니 안팎에서의 처지가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쌀협상내용을 국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쌀협상 국회비준도 불투명해 졌다. 여야의 입장차도 크고 9월 정기국회로 비준을 연기하지는 주장도 상당하다.

처제에 쌀의 관세화 유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일본과 대만은 조기에 관세화를 받아들인바 있다.

관세화 유예가 쌀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쌀농업의 경쟁력은 별로 강화되지 못했다. 과보호는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쌀수입의 조기 관세화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 쌀 협상 비준동의안 가결해야

쌀 협상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13·14일의 청문회를 포함해 35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상에 대해 잘못을 따져보는 첫 시도였음에도 의혹만 제기했을 뿐 국조보고서 채택조차 못할 정도로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은 처음부터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에 대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장했다는 논란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유의하겠다는 정부의 문서상 어휘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기 때문이다.

중국산 사과·배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에 대한 정부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개시 결정이 이면합의를 통한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검역과 수입 허용이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진위 규명은 쉽지 않았다.

수입의무물량(MMA) 외에 식량원조용으로

10년간 인도·이집트산 쌀 11만여t을 구입키로 한 데 대해 MMA를 낮추려는 정부의 편법이라는 의혹도 거론됐다. 이 역시 식량원조용 쌀은 국내 유입이 안 된다는 점, 쌀 협상 타결을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조사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차가 도드라짐으로써 앞으로 있을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통과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를 비롯해 국회 내에서도 비준 반대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비준이 무산되더라도 관세화 자동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나 이는 근거가 확실치 않은 주장이다.

어렵게 이뤄낸 정부의 쌀 협상안을 국회가 불확실성에 입각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부가 쌀 협상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 위축돼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비준안의 신속한 처리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다.

2005년 06월 15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쌀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

35일간 활동 종료..비준연기론 대두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조재영기자 =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는 15일 여야간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단일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채 3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조사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쌀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열린우리당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만큼 협상 및 발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는 등 비준동의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불리한 조건 하에서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상 사전준비 부족, 보고 누락, 관계기관 협조 미비, 사후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가 필요하며, 지난해 12월 국회답변을 통해 부가합의 사항 존재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허상만(許祥萬) 전 농림장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의 부가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자 합의사항은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히 피해서 체결한 이면합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농민과 단체, 국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준 여부에 따르는 여러 상황에 대한 예상문제를 분석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또 협상 책임자 및 발표 당시 은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허상만 전 농림장관에 대한 위증혐의 고발 및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이명수(李銘洙) 농림차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결과보고서 초안을 통해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면서 ▲정부의 재협상 ▲국회 비준 반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쌀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9인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쌀협상안의 6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 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대신할 DDA 협상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8월 중순께 전 농민 단체와 정부 관계자, 국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모임에는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홍문표(洪文杓) 김영덕(金永德) 의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최인기(崔仁基)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jh@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과 답답한 우리의 현실

쌀 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강해 정치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권은 물론 여권도 비준동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를 거치고서도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비준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도 높다.

비준 반대를 외치는 농민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쌀 협상 결과대로 쌀시장이 추가개방되면 쌀 산업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은 중국, 미국 등 주요 쌀생산국보다 훨씬 낮다. 단기간에 경쟁력을 높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농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직접 모내기한 벼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쌀 협상을 다시 하기로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재협상을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하다. 자칫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해야 하고, 그러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쌀 협상 비준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의무수입물량 반입과 수입쌀 시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협상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이 우려된다.

쌀 협상 결과를 놓고 '이면합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탓이다. 정부는 협상 상대국별 '부가합의' 과정도 충분히 공개해야 했다. 협상 기법상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본협상 과정은 처음부터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오지 않았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쌀산업은 3백50만 농민의 생존은 물론 식량안보,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보완해 농민들의 위기감을 덜어줘야 한다. 정치권도 정치논리를 떠나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6월 22일 34

## 지금 농민이 정부와 맞설 때인가

쌀협상 비준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농민단체들이 논을 갈아엎고 농기계를 불태우며, 쌀 출하를 봉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일단 덮고 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비준안 처리 시한이 연말까지라 해도 농민의 분노가 진정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쌀협상은 이차피 후유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크고 작은 잘못이 불만을 증폭시킨 점도 있다. 쌀협상을 타 품목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당국자의 공언은 우습게 돼 버렸고, '이면 합의'가 아니라 '부가 합의'라는 해명은 군색할 뿐이다. 불만에 불신까지 겹치면 상황은 악화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농민단체들이 무조건 반대만 외쳐서는 곤란하다. 집단시위나 단식농성이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협상 요구도 무리한 주장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 절대 불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모

두 뿌리치기 어려웠던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쌀이 갖는 특별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농산물 시장을 계속 걸어야겠다는 불가피성도 살펴야 한다.

지금은 농민과 정부가 맞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농업경쟁력 확보만이 개방화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경쟁상대는 바로 미국·중국·호주 등 외국의 농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70조원을 농업구조조정에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농가빚 탕감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이래서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퍼주기가 재연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된 농업종합대책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농민을 설득할 수 있다. 비준안 처리의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

## V. 농민단체 의견수렴('05년 7 ~ 8월)

여 백

## 《 관련 기사 》

- 정부 쌀 협상 비준 농민 의견수렴 나서 <2005. 7. 11, 연합뉴스>
- 정부 '쌀 협상' 농민의견 수렴 나섰다<2005. 7. 11, 문화일보 12면>
  - 농림부 장·차관-농민단체 대표 '합동 워크숍'
- 농림부 '農心읽기'<2005. 7. 15, 문화일보 12면>
  - 농민들 제안 정책반영, 쌀 협상 적극 의견수렴
- 박 농림 "농민대표도 협상 동행"<2005. 7. 15, 내일신문 14면>
  - 농림부·농업인단체 1박2일 워크숍...쌀 개방 대책 등 토론
- "쌀 협상 난제 함께 풀자" 머리 맞댄 정부·농민단체<2005. 7. 19, 세계일보 12면>
  - 워크숍서 격의 없는 토론
- 농림부 4일 농민단체와 쌀 협상 간담회 <2005. 8. 3, 연합뉴스>
- 쌀 협상관련 농민단체 간담회 개최<2005. 8. 3, 이데일리>
  - 지난 7월이후 두 번째 개최
- 농림부 쌀 협상보완책 20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서울경제 4면>
-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등 농림부, 20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한국경제 A6면>
- 물량 법제화 등 '쌀 협상 비준 핵심과제' 선정<2005. 8. 6, 파이낸셜뉴스 2면>
- 농림부-농업인단체,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2005. 7. 18, 농수축산신문>
  - 쌀 협상 문제 해법 '함께 고민'
  - "국회비준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 의혹, 문제해결 보다는 현안 나열 아쉬워, 실사구시적 대안 도출 노력 뒤따라야

여 백

2005년 07월 11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 <정부 쌀협상 비준 농민 의견수렴 나서>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농림부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쌀협상 비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14~15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어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며, 농림부에서는 박홍수 장관과 이명수 차관, 윤장배 통상정책관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농림부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쌀협상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쌀소득보전방안과 농가부채대책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농민단체들도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 인상,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의 쌀농가 소득 추가 안정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장 개방에 대비해 119조 투융자계획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대책을 이미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중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쌀협상' 농민 의견 수렴 나섰다

## 농림부장·차관-농민단체 대표 '합동 워크숍'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 농림부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설득에 나선다. 이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쌀협상·국회비준 처리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14, 15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고 쌀협상·국회비준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며, 농림부에서는 박홍수 장관과 이명수 차관, 윤장배 통상정책관 등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농림부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쌀협상 결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쌀소득보전방안과 농가부채대책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농민단체들도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 인상,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쌀농가 소득 추가 안정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농민단체들과 견해차를 좁힐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을 대상으로 119조원의 투융자계획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대책을 설명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중 타당성이 있는 사안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봉천기자 bhcha@

# 농림부 '農心읽기'

## 농민들 제안 정책반영 쌀협상 적극 의견수렴

■ 농촌 이장 출신인 박홍수(사진)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넘기면서 농림부가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의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으로 실제 활용하는가 하면 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박 장관 이하 전 간부진이 직접 나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농업 희망찾기'란 이름으로 정책을 공모, 27개 농민단체가 제안한 66개 사업중 18개 정책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과정'을 내년 정식 교육과정으로 신설,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최우수상에 선정된 지역대학의 농촌마을 컨설팅(충북 괴산군 새마을회), 귀농자 전문능력 활용(귀농운동본부) 등도 정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며 하반기(7-12월) 전 농



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 결과

에 대한 국회비준이 실패하자 농민단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림부는 14일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단체 활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1급 이상 농림부 간부진 전원이 참석, 농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들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쌀 협상 후 쌀 소득보전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 직불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중 타당성 있는 사안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봉현기자 bhcha@



# 농림부 '農心읽기'

## 농민들 제안 정책반영 쌀협상 적극 의견수렴

■ 농촌 이장 출신인 박홍수(사진)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넘기면서 농림부가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의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으로 실제 활용하는가 하면 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박 장관 이하 전 간부진이 직접 나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우리 농업 희망찾기'란 이름으로 정책을 공모, 27개 농민단체가 제안한 66개 사업중 18개 정책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이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의 '여성농업인 아카데미 과정'을 내년 정식 교육과정으로 신설, 시범운영하고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최우수상에 선정된 지역대학의 농촌마을 컨설팅(충북 괴산군 새마을회), 귀농자 전문능력 활용(귀농운동본부) 등도 정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며 하반기(7-12월) 전 능



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 결과

에 대한 국회비준이 실패하자 농민단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림부는 14일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1급 이상 농림부 간부진 전원이 참석, 농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들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쌀 협상 후 쌀 소득보전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 직불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농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중 타당성 있는 사안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봉원기자 bhcha@

# 박 농 림 “농민대표도 협상 동행”

농림부 · 농업인단체 1박2일 워크숍 ... 쌀개방 대책 등 토론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림부 고위 관료들이 1박2일간 벵타이를 풀고 머리를 맞댔다. 양측이 최근까지 쌀협상 국회비준과 쌀시장 개방대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농림부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주요 농정 현안 관련 농업인단체 초청 워크숍'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홍수(사진) 농림부장관을 비롯 이명수 차관 등 농림부 국실장급 8명이 참석하고, 농업인단체로는 엄성호 농민단체연합회 회장과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농림부 간부공무원들과 농업인대표들은 이틀간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쌀시장 개방대책과 농업·농촌 발전전략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초 참여키로 했던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내부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논란없이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추진과정에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농업관련 각종 국제협상에서는 협상단이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동행해 통상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없이 농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쌀협상과정에서의 통상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농가부채 문제를 이자율 몇% 낮춰주는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법을 기초로 농지은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부채가 많아 경영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이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10년이던 20년이던 실현가능한 상환계획을 세워 빚을 갚아나가면서 나중에 농지은행으로부터 이 농지를 되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어촌장학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관련 장학금제도를 통합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장학금은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사회 매출이 줄어들면서 장학금도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농어촌 자제들은 최소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도록 현재 농림부 농협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장학금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림부가 처음으로 농업인대표들을 초청, 농업 장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일부분은 서로간 의견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 박 농림 “농민대표도 협상 동행”

농림부 · 농업인단체 1박2일 워크숍 ... 쌀개방 대책 등 토론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림부 고위 관료들이 1박2일간 벵타이를 풀고 머리를 맞댔다. 양측이 최근까지 쌀협상 국회비준과 쌀시장 개방대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농림부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주요 농정 현안 관련 농업인단체 초청 워크숍’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홍수(사진) 농림부장관을 비롯 이명수 차관 등 농림부 국실장급 8명이 참석하고, 농업인단체로는 엄성호 농민단체연합회 회장, 장과 윤금순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농림부 간부공무원들과 농업인대표들은 이틀간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쌀시장 개방대책과 농업·농촌 발전전략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당초 참여키로 했던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은 내부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각종 국제협상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논란없이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 추진과정에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농업관련 각종 국제협상에서는 협상단이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동행해 통상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농민단체 등과 협의없이 농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쌀협상과정에서의 통상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농가부채 문제를 이자율 몇% 낮춰주는 대중요법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법을 기초로 농지은행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부채가 많아 경영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은행이 대신 빚을 갚아줄 것”이라며 “해당 농가는 10년이던 20년이던 실현가능한 상환계획을 세워 빚을 갚아나가면서 나중에 농지은행으로부터 이 농지를 되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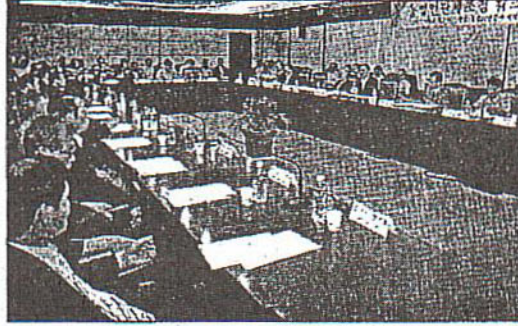
최근 논란이 된 농어촌장학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농업관련 장학금제도를 통합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대안을 내놴다.



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장학금은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사회 매출이 줄어들면서 장학금도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농어촌 자제들은 최소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도록 현재 농림부 농협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장학금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림부가 처음으로 농업인대표들을 초청, 농업 장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일부분은 서로간 이견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농림부가 개최한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 및 간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쌀 협상 난제 함께 풀자” 머리맡댄 정부·농민단체

### 워크숍서 격의없는 토론

농림부가 농민단체들을 상대로 쌀 협상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실패하면서 농업인들과 합동 워크숍을 여는 등 농업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농림부는 최근 경기도 의암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 및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부 박홍수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청와대 황민영 농업특별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잠정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은 정영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하는 관료와 농업인 대표 등 각계인사가 다 모인 만큼 농촌의 장래를 위해 진솔한 격의 없는 대화를 하자”며 분위기를 띄웠다.

민저 쌀 협상 관련 설명에 나선 농림부는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대비한 119조 원 투융자 계획, 쌀농사 소득보전 대책,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농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며 “농업 문제는 농업계 스스

로 풀어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때 경쟁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황준근 사무총장, 전국농민연대 정기환 집행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 등이 농업인단체를 대표하여 쌀협상 비준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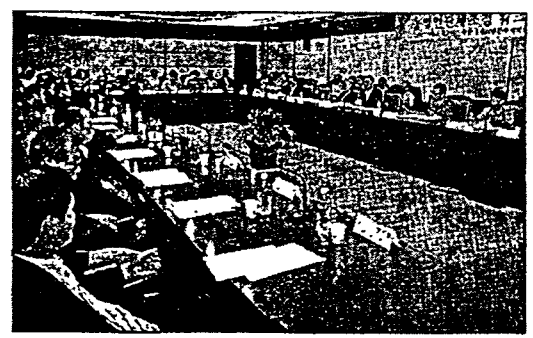
이들은 ▲식품산업 육성대책 강화 ▲RPC 중심의 민간유류 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대책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단체들의 합성화로 이들 단체들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민영 농특위원장은 “농특위도 최선을 다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전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최대한 안전한 쌀협상 비준등의 관련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림부와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갖는 대화의 자리라는 데 이날 워크숍의 의미를 부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쌀 개방 협상 등 산적한 농업문제로 대표들과 정부가 모처럼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면 쉽게 풀린다는 생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대화와 만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훈 기자

kkkr@segye.com



○농림부가 개최한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 및 간부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쌀 협상 난제 함께 풀자” 머리맡댄 정부·농민단체

워크숍서 격의없는 토론

농림부가 농민단체들을 상대로 쌀 협상과 관련해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실패하면서 농업인들과 합동 워크숍을 여는 등 농업인들 의견을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농림부는 최근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교육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가톨릭농민회 등 22개 농민단체 대표 및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단체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부 박홍수 장관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청와대 참모인 농어업특별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은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장장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은 정영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표하는 관료와 농업인 대표 등 각계인사가 다 모인 만큼 농촌의 장래를 위해 진솔한 격의 없는 대화를 하자”며 분위기를 띄웠다.

먼저 쌀 협상 관련 설명에 나선 농림부는 쌀협상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에 대비한 119조 원 투융자 계획, 쌀농가 소득보전 대책,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농업인이 머리맡 맞대고 고민하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며 “농업 문제는 농업계 스스

로 풀어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때 경쟁력이 배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유근근 사무총장, 전국농민연대 정기환 집행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영구 사무총장 등이 농업인단체를 대표하여 쌀협상 비준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식품산업 육성대책 강화 ▲RPC 중심의 민간유류 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대책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단체들의 합성화로 이들 단체들이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민영 농특위원장은 “농특위도 최선을 다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며 “전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최대 현안인 쌀협상 비준동의의 관련 문제를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림부와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갖는 대화의 자리라는 데 이날 워크숍의 의미를 부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쌀 개방 협상 등 산적한 농업문제로 대표 각각만을 세우던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정부가 모처럼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맡 맞대면서 풀린다는 생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때까지 대화와 만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기자  
kkkr@segye.com

2005년 08월 03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 농림부 4일 농민단체와 쌀협상관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농림부는 4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쌀협상 비준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쌀품질 제고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또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통상협상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협상관련 농민단체간담회 개최

지난 7월 이어 두번째 개최

입력 : 2005.08.03 11:05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농림부는 오는 4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농림부 차관 등 간부들과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차 농림부-농민단체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14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에서 정부는 '선대책 후협상' 원칙에 따라 쌀 소득보전직불제, 쌀품질 경쟁력 제고대책 등 쌀협상에 대비해 이미 준비된 시책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추가 보완대책으로 쌀뿐만 아니라 유통·축산 등 농정 전문야를 망라한 64건의 다양한 건의를 제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이번 제2차 간담회를 통해 농업계와 정부의 시각차이를 좁히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국회비준동의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DDA 및 FTA 협상동향을 설명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상욱 [sukim@edaily.co.kr](mailto:sukim@edaily.co.kr)

Copyright ©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 서울경제

08월 06일 004면  
농림부 쌀협상보완책  
20대 핵심과제 선정

농림부는 지난 4일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회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쌀 협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쌀 공공비축물량을 1,000만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농지은행제 조기 도입, 농민들의 농업협상 참여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08월 06일 a06면  
식량자급계획 억제화 등  
농림부, 20대 핵심과제 선정

농림부는 지난 4일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회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쌀협상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식량자급계획 억제화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쌀 공공비축물량을 1000만석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고정 직불금 단가 인상 △쌀자조금 근거 법률 제정 △농지은행제 조기 도입 △농민들의 농업협상 참여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정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업인 단체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 물량 법제화 등 '쌀협상 비준 핵심과제' 선정

농림부는 지난 4일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협상 국회 비준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쌀협상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식량자급계획 법제화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쌀 공공비축 물량을 1000만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고정 직불금 단가 인상,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농지은행제 조기 도입, 농민들의 농업협상 참여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정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농업인 단체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상중계 [농림부-농업인단체,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

# 쌀협상 문제 해법 '함께 고민'



농림부는 지난 14일 농업 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을 가졌다.

며 "정기국회전이라도 시행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와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통대책의 보완을 비롯해

쌀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에 모든 농업인 단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회의가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보다는 현안사항을 나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업인단체총회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농업계 스스로가 방향을 잡고, 풀어가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박장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쌀협상결과 및 대책에 대한 농림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만하면 된게 아닌가'이

## "국회비준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 의혹 문제해결 보다는 현안 나열 아쉬워 실사구시적 대안 도출 노력 뒤따라야

소농보호를 통한 농업·농촌발전, 쌀 품질인증제도 도입, 대국민홍보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쌀 품질향상 및 수급조절가능을 담당하는 RFC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 RFC를 소유한 단위조합을 아우를 수 있는 농업중앙회를 통해 실효성있는 쌀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 향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쌀 산업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됐으나 농림부의 답변은 여전히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 농업인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쌀 협상 국회비준에 가장 반발이 심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채 워크숍이 진행돼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인단체들이 좀더 솔직한 입장에서 대화하려는 자세와 사안별 우선 순위를 정해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경민 kmj@kafews.co.kr

쌀 협상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업인간에 벌어진 분선의 골을 좁히기 위해 농림부와 농업인단체가 가슴을 열었다.

지난 14일 농업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요농정 현안 관련 워크숍'에서 농림부 관계자와 농업인단체장들은 쌀 협상결과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은 쌀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대책을 비롯해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실사구시적인 접근 등 깊이있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측은 이같은 의견이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업인단체들의 정책제안이 바로 현장의 소리"라며 "쌀을 비롯한 농업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부와 농민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차관보, 실·국장·등 농림부 고위공직자 전원과 농업인단체대표들이 현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문제의 답을 찾을때까지 이같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해 기대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은 쌀 협상 국회비준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쌀 대책수준을 둘러싼 정부 및 농업인단체간

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그 폭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 왜 워크숍을 개최했나

농정당국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과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쌀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을 '받느냐, 못받느냐'이다. 농림부는 당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고 했으나 농업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기국회로 미뤄진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인단체들의 반발을 달랠만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

해 사실상 올 정기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쌀 협상결과에 대한 농업인단체들의 이해를 구하고, 농업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수렴해 쌀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 어떤 내용이 제기됐나

농업인단체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쌀 협상이후 각종 판형화와

토론회, 심지어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으나 아무런 개선점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채 국회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에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고정리별금 상환조정, 조건별 리지약리별금 확대시행, 수확기 수급 안정, 식량자급을 법제화 등 각종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임상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은 "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19조 부·용지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 지상중계 [농림부-농업인단체,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

# 쌀협상 문제 해법 '함께 고민'

쌀 협상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농업인간에 벌어진 불신의 골을 좁히기 위해 농림부와 농업인단체가 기습을 열었다.

지난 14일 농업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요농정 현안 관련 워크숍'에서 농림부 관계자와 농업인단체장들은 쌀 협상결과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은 쌀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대책을 비롯해 근본적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실무구시적인 접근 등 깊이있는 의견을 내놓았고, 정부측은 이같은 의견이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업인단체들의 정책제안이 바로 현정의 소리"라며 "같은 비롯한 농업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부와 농업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장·차관을 비롯한 차관보, 실·국장, 동 농림부 고위공직자 전진과 농업인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문제의 답을 찾을 때까지 이같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갖기로 해 기대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은 쌀 협상 국회비준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쌀 대책수준을 둘러싼 정부 및 농업인단체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그 폭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14일 농업기반공사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농정 현안 워크숍'을 가졌다.

며 "정기국회전이라도 시행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근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정부에서는 쌀 대책을 충분히 내놓고, 쌀 협상과정도 다 검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와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통대책의 보완을 비롯해

쌀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에 모든 농업인단체장을 참여시킴으로써 회의가 다소 신인하게 진행됐다.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보다는 현안사항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단체출신"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농업계 스스로가 방향을 잡고, 풀어가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결과 및 대책에 대한 농림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만하면 된게 아닌가'이

## "국회비준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 의혹 문제해결 보다는 현안 나열 아쉬워 실시구시적 대안 도출 노력 뒤따라야

소농보호를 통한 농업·농촌발전, 쌀 품질인정제도 도입, 대국민홍보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쌀 품질향상 및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하는 RPC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 RPC를 소유한 단위조합을 아우를 수 있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실행가능한 쌀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 향후과제

이번 워크숍에서는 쌀 신업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됐으나 농림부의 답변은 여전히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 농업인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으로서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쌀 협상 국회비준에 가장 반발이 심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데 워크숍이 진행돼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인단체들이 좀더 솔직한 입장에서 대화하려는 자세와 시안별 우선 순위를 정해 실무구시적인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김경민 kmj@ethews.co.kr

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그 폭을 줄이는데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 ※ 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정당국이 인고 있는 최대 현안과제는 올 정기국회에서 쌀 협상결과에 대한 비준을 '반느냐, 못반느냐'이다. 농림부는 당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고 했으나 농업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기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인단체들의 반발을 달랠만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

해 사실상 올 정기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쌀 협상결과에 대한 농업인단체들의 이해를 구하고, 농업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다시한번 수렴해 쌀 협상결과에 따른 대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 어떤 내용이 제기됐다

농업인단체들이 쌀 협상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쌀 협상이후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심지어 국정조사까지 실시했으나 아무런 개선결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채 국회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에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조건불리지역직불액 확대시행, 수확기 수급 안정, 식량자급을 법제화 등 각종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임상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은 "쌀 신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19 조 부-용자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여 백

## VI. 국회비준 전문가시각('05년 7월)

여 백

《 관련 기사 · 기고 》

- “쌀 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시장개방”, KIEP<2005. 7. 17, 연합뉴스>
- “쌀 협상 9월 국회비준 안되면 전면개방 불가피”<2005. 7. 18, 문화일보 12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예외조치 효력 없어져
- KIEP, “쌀 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관세화”<2005. 7. 17, 파이낸셜뉴스>
- [기고] 늦출 수 없는 쌀 협상 비준<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2005. 7. 15, 매일경제 7면>
  - 협의 벗은 쌀 협상 ‘이면합의’,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되어야
- [시론] 쌀 협상 비준 미룰 수 없다<임정빈 경상대 농경제학 교수, 2005. 7. 19, 한국경제신문 A34면>
  - 국회동의 지연엔 수급관리 큰 부담,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보완책 시급
- [칼럼] 이제 쌀 협상 문제 역사에 묻자<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05. 7. 27, 농민신문>
- [기고] 쌀 협상 국회비준 시급하다<정영진 농림부 국제통상 자문변호사, 2005. 7. 28, 문화일보 38면>
- [광화문에서] 쌀 개방의 딜레마<김상영 동아일보 경제부장, 2005. 7. 29, 동아일보 A26면>
- [기고] 쌀 협상 비준 논란 끝내야<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과학부 교수, 2005. 7. 30, 경향신문 23면>



여 백

2005년 07월 17일

연합뉴스리더 국문뉴스

## "쌀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시장개방"<KIEP>

(서울=연합뉴스) 이 울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쌀 시장개방(관세화)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쌀 관세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아직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타결된 쌀 협상안에 담긴 관세화 유예조치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합의가 없다면 예외조치는 끝나고 관세화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연내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의 구매를 마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가 늦어져 시판준비가 늦춰지면 올해내 처리돼야 할 수입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돼 시판물량이 커지고 쌀 협상 이행계획의 불이행으로 협상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먼저 국회비준을 신속하게 하고 이행계획을 처리하는 게 협상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DDA협상이 구체화 됐을 때 실익분석을 통해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쌀협상 9월 국회비준 안되면 전면개방 불가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예외조치 효력 없어져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 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으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

일 '쌀 협상 국회 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쌀협상의 국회 비준이 거부되면 쌀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국내 쌀 농가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

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미국, 중국, 캐나다 등 9개국과 맺은 쌀 협상안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일종의 예외조치인데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문에 2004년 12월까지 개방 유예와 관련한 협상을 끝내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회가 쌀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외조치의 효력이 없어져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연내에 수입쌀 의무 수입물량의 구매를 마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차봉원기자 bhcha@

2005년 07월 17일

## KIEP, “쌀협상 국회비준 안되면 관세화”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이 거부될 경우 쌀 관세화(시장개방)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발표한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을 통해 국회 비준이 거부될 경우 쌀 관세화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쌀 농가들이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P는 “이미 타결된 쌀 협상안에 담긴 관세화 유예조치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조치이기 때문에 국내 합의가 없으면 예외조치는 끝나고 관세화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연내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의 구매를 마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구매가 늦어져 시판준비가 늦어지면 연내 처리돼야 할 수입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돼 시판물량이 커지고 쌀 협상 이행계획의 불이행으로 협상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KIEP 관계자는 “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이상 국회비준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협상상대국의 이익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그 이후에 DDA협상이 구체화 됐을 때 실익을 따져 관세화 전환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 [hikim@fnnews.com](mailto:hi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4년 수행된 '쌀의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결렬됐다. 쌀협상 결과 한국은 2005년부터 또다시 10년 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허용됐다.

이 같은 쌀협상 결과로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시 만들어진 한국의 이행계획서를 수정해야 했고 이는 중요한 조약 체결에 해당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에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특위가 쌀협상에 대한 이면합의 등 문제점을 조사했지만 결국 이렇다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한·칠레 FTA 체결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관세화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다. 즉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해 관세가 부과돼야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의 쌀에 대한 수량적 통제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 협의벗은 쌀협상 '이면합의'

지난 10년 간 이러한 예외를 허용받은 한국이 또다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을 한 것인데 이러한 협상은 처음부터 어렵기만 한 것이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허용받기 위해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 협상을 통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

# 늦출수 없는 쌀협상 비준

기고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cessions)를 주도해 요구받았다.

쌀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를 연장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관련 국가들에 뭔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보는 WTO체제의 기본 원칙인 '양허의 균형'(balance of concessions)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절차는 WTO의 검역(SPS)협정 등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검역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은 엄밀하게 말하면 양허(양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허는 일반적으로 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 개방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쌀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추가적인 내용은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를 허용받기 위해 부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 등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TO 농업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은 2004년에 시작해 종료돼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협상을 수행했다.

따라서 2005년이나 그 후의 재협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일 한국이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148개 모든 WTO 회원국들이 덤벼들 것이고 별의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 결과는 분명히 작년의 협상 결과보다 한국에 훨씬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 등이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의 거부를 주장하는데, 이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의 포기물의 미한다.

이렇게 되면 쌀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가

과연 쌀농가를 포함한 농민단체 등이 원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어야 한다면 지난해 힘들여 협상한 한국이 이제 와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로서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돼야

또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가 처리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는다. 즉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의 첫 해인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쌀 입찰 등이 시간에 쫓겨 자칫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쌀 생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쌀협상 결과는 한국이 원하는 내용을 대체로 반영했고 이미 WTO에서 다자적 검증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쌀농가를 포함한 농민단체 등의 어려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농민이 다수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가 이익 전체를 보아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은 금년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이 꼭 동의돼야 한다.

이제 국회가 현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04년 수행된 '쌀의 관세화 유예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결렬됐다. 쌀협상 결과 한국은 2005년부터 또다시 10년 간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허용됐다.

이 같은 쌀협상 결과로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시 만들어진 한국의 이행계획서를 수정해야 했고 이는 중요한 조약 체결에 해당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중에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특위가 쌀협상에 대한 이면합의 등 문제점을 조사했지만 결국 이렇다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를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한·칠레 FTA 체결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관세화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다. 즉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의 쌀에 대한 수량적 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 협의벗은 쌀협상 '이면합의'

지난 10년 간 이러한 예외를 허용받으려는 한국이 또다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을 한 것인데 이러한 협상은 처음부터 어렵지만 한 것이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허용받기 위해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에 협상을 통해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

# 늦출수 없는 쌀협상 비준

기 고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



cessions)를 주도하도록 요구받았다.

쌀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를 연장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관련 국가들이 뭔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보는 WTO체제의 기본 원칙인 '양허의 균형'(balance of concessions)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절차는 WTO의 검역(SPS)협정 등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검역절차의 '신속한 처리 노력'은 엄밀하게 말하면 양허(양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허는 일반적으로 관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 개방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쌀협상에서 정부가 약속한 추가적인 내용은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를 허용받기 위해 부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농민단체 등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TO 농업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은 2004년에 시작해 종료돼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협상을 수행했다.

따라서 2005년이냐 그 후의 재협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일 한국이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148개 모든 WTO 회원국들이 덤벼들 것이고 별의별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 결과는 분명히 작년의 협상 결과보다 한국에 훨씬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 등이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의 거부를 주장하는데, 이는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의 포기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쌀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가

과연 쌀농가를 포함한 농민단체 등이 원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힘들어 협상한 한국이 이제 와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로서의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올해 관세화 유예 연장돼야

또한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가 처리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는다. 즉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의 첫 해인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쌀 입찰 등이 시간에 쫓겨 자칫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쌀 생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쌀협상 결과는 한국이 원하는 내용을 대체로 반영했고 이미 WTO에서 다자적 검증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쌀농가를 포함한 농민단체 등의 어려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농민이 다수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가 이익 전체를 보아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은 금년부터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이 꼭 동의돼야 한다.

이제 국회가 현명하게 움직여야 한다. 국회가 국민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 시론

## 임정빈

경상대 교수·농업경제학



# 쌀협상 비준 미룰 수 없다

에서 본질적으로 어려운 협상이었다. 또 기존에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일본 대만 등이 유예기간 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수출국들과 5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우리의 요구대로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적인 수입물량을 2004년 4% 수준에서 내년 기준 중량당 2014년까지 7.95%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 관세화 유예라는 목적 달성을

과를 국내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관세화 유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선택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WTO 규정에 따라 이미 모든 협상절차가 종료돼 재협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재협상에 응할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또 국회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결과가 유지되더라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차라리 아니라 불해와 추수수확물량과 내년으로 넘어감은으로써, 국내 쌀 수급관리의 부담과 함께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대부분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도출해낸 관세화 유예의 연장 조건이 그래도 관세화로의 전환을 통한 개방보다는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쌀 산업대책을 보완한 보다 내실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농가와 농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튼 이제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과 갈등으로 시간을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국내대책 추진과 현재 급물살을 타고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의혹규명 차원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국회 비준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의 차원에서 신속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비준동의의 거부 의사를 보였다. 농민단체들은 협상무효를 주장하며 비준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진행된 쌀 협상은 1995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인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의 성격이었다. 만일 한국이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 쌀 협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농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쌀만은 다시 한번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에 이해 당사국인 9개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4년 이후에도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취급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에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모든 협상대상국들이 수용하는 공통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측면

## 국회동의 지연엔 수급관리 큰 부담

##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보완책 시급

위해 이해당사국들이 요구하는 양자적 요구사항을 일부 추가적으로 합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결과를 다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 받음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으며, 특히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보다 개혁적인 시장개방 방식이 논의 중인 도하계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향후 결과를 보가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회비준 동의 절차는 이러한 쌀 협상 결

## 시론



임정빈

경상대 교수·농업경제학

쌀 협상 결과에 대한 의욕 규명 차원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국회 비준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외 차원에서 신속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비준동의의 거부 의사를 보였다. 농민단체들은 협상무효를 주장하며 비준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진행된 쌀 협상은 1995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기본 원칙인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의 성격이었다. 만일 한국이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면, 쌀 협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농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쌀만은 다시 한번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해 당사국인 9개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04년 이후에도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처우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에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모든 협상대상국들이 수용하는 공통 합의물 도출해야 한다는 측면

# 쌀협상 비준 미룰 수 없다

에서 본질적으로 어려운 협상이었다. 또 기존에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일본 대만 등이 유예기간 중 관세화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수출국들과 5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우리의 요구대로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적인 수입관세를 2004년 4% 수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7.95%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 관세화 유예라는 목적 달성을

## 국회동의 지연된 수급관리 큰 부담 농민단체 의견수렴 등 보완책 시급

위해 이해당사국들이 요구하는 양자적 요구사항을 일부 추가적으로 합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결과는 다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 받음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으며, 특히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보다 개혁적인 시장개방 방식이 논의 중인 도하계 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향후 결과를 평가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회비준 동의 절차는 이러한 쌀 협상 결

과를 국내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관세화 유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협상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선택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WTO 규정에 따라 이미 모든 협상절차가 종료돼 재협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재협상에 응할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또 국회비준이 지연되는 경우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결과가 유지되더라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차라뿐만 아니라 농업 외 주요 수출품과의 내외국으로 넘어감으로써, 국내 쌀 수급관리의 부담과 함께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 등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

대부분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도출해낸 관세화 유예의 연장 조건이 그래도 관세화로 전환을 통한 개방보다는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쌀 산업대책을 보완한 보다 내실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농가와 농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무튼 이제는 쌀 협상의 국회비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갈등으로 시간을 버리기 보다는 오히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국내대책 추진과 현재 급물살을 타고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정환 칼럼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0년 후에는 쌀을 관세화 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비해 어떻게 국내 쌀값은 낮추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

이제 쌀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자

지 난 3월 말 쌀 관세화 유에 협상이 끝났다.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간 유예하는 타결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는 두달 가까이 국정조사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다. 국정조사는 겨우 큰 파란 없이 끝났으나 농민단체는 협상결과의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는 비준을 회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준 문제에 매달려 있다.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남겨 우리 모두를 국정조사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쌀협상의 진실을 인정하고 그 한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쌀 생산농가들의 희망대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되, 2014년까지 저율관세수입(TRQ)물량을 기준연도 소비량의 8% 수준까지만 중량하기로 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또 저율관세수입 물량을 모두 국영무역으로 하고 그 대부분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받았다. 여기에

2014년 이전에 관세화하는 경우 저율관세수입물량을 그 당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은 일본·대만의 경우보다 분명 유리한 결과임을 인정하자. 또한 지난해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이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농정 사상 획기적 ‘사건’임을 인정하자. 동시에 약정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세계무역기구 규범 아래서 소득안정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혀 놓았음도 인정하자.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농업계는 신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소득보전직불제를 필두로 하는 일련의 쌀 관련 대책은 관세화까지를 포함하는 쌀협상 결과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쌀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다른 문제는 따로 해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매입량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처럼 농가와 농협이 수탁제를 발전시켜 흥수출하 요인을 제거해야 근본

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설령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그 대부분이 보전될 것이다. 정부도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므로 폭락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 문제는 수입량이 늘 정 어나는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보전직불제로 쌀생산 감소속도는 둔화되 재고가 급증할 경우다. 어떻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늦어도 10년 후에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므로 그에 대비하여 어떻게 국내 쌀값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쌀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고 이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세계화의 수레비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우리 농업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02-3463-7623.

belmont@krei.re.kr

• 본 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정환 칼럼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10년 후에는 쌀을 관세화 해야 한다. 이제 이에 대비해 어떻게 국내 쌀값은 낮추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

## 이제 쌀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자

지 2005년 3월 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끝났다. 쌀 관세화를 다시 10년간 유예하는 타결안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면합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는 두달 가까이 국정조사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다. 국정조사는 겨우 큰 파란 없이 끝났으나 농민단체는 협상결과에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는 비준을 회피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비준 문제에 매달려 있다.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소지를 남겨 우리 모두를 국정조사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쌀협상의 진실을 인정하고 그 합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쌀 생산농가들의 희망대로 관세화할 10년간 유예하되, 2014년까지 저율관세수입(TRQ)물량을 기준연도 소비량의 8% 수준까지만 증량하기로 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 또 저율관세수입 물량을 모두 국영무역으로 하고 그 대부분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받았다. 여기에

2014년 이전에 관세화하는 경우 저율관세수입물량을 그 당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은 일본·대만의 경우보다 분명 유리한 결과임을 인정하자. 또한 지난해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이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농정 사상 획기적 '사건'임을 인정하자. 동시에 약정 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세계무역기구 규범 아래서 소득안정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혀 놓았음도 인정하자.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농업계는 신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소득보전직불제를 필두로 하는 일련의 쌀 관련 대책은 관세화까지를 포함하는 쌀협상 결과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쌀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다른 문제는 따로 해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매입량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처럼 농가와 농업이 수탁제를 발전시켜 혼수출하 요인을 제거해야 근본

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설령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그 대부분이 보전될 것이다. 정부도 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므로 폭락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작 문제는 수입량이 늘어난다는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고 소득보전직불제로 쌀생산 감소속도는 둔화되 재고가 급증할 경우다. 어떻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늦어도 10년 후에는 쌀을 관세화해야 하므로 그에 대비하여 어떻게 국내 쌀값은 낮추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쌀협상 문제는 역사에 묻고 이 문제에 모두가 매달려야 한다. 세계화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우리 농업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02-3463-7623.

belmont@krci.re.kr

•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정영진  
농림부 국제통상 자문변호사

## 쌀협상 국회 비준 시급하다

■ 현재 우리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하여 국회비준 동의가 가을 정기국회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작년 한해동안의 협상을 거쳐 올해초 WTO의 검증절차까지 마친 쌀협상 결과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타결된 쌀협상은 우리나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성공적인 협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이번에 타결된 쌀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또다시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게 되었는데 이는 WTO협정체제의 기본원칙인 비차별 원칙과 수량제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WTO·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진행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의 이익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에 비하여 높을 경우 언제든지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다.

정부가 9개의 협상대상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WTO농업협정에서는 10년간 인정받아왔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연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회원국들에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상대상국에 대하여 부가적인 합의를 해주는 것은 WTO농업협정에 비춰 당연한 것이었다. 정부가 이들 국가에 한 부가합의의 내용을 보면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 등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국제법상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에 지나지 않는 것

들이다.

이러한 쌀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WTO농업협정상 우리나라는 작년 12월31일까지 관세화 유예를 허용받고 있을 뿐이므로 금년 1월1일부터는 관세화로 이행해 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가 실패로 끝날 경우, 즉시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국내 쌀농가에 대한 후유증은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을 감수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WTO·DDA협상이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등 각종 통상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과거 미국 의회(상원)는 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통상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은 미 행정부가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의회 비준동의의 확실성을 제고하고자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나가기 전에 의회로부터 '통상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행정부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명분이거나 근거없이 정부가 다수의 국가와 어렵게 타결한 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정부의 대외협상에 매우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기고

정영진

농림부 국제통상 자문변호사

### 쌀협상 국회 비준 시급하다

■ 현재 우리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하여 국회비준 동의가 가을 정기국회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작년 한해동안의 협상을 거쳐 올해초 WTO의 검증절차까지 마친 쌀협상 결과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타결된 쌀협상은 우리나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성공적인 협상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이번에 타결된 쌀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또다시 1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게 되었는데 이는 WTO협정체제의 기본적인 비차별 원칙과 수량제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WTO·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진정결과를 보아가며 관세화의 이익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것에 비하여 높을 경우 언제든지 관세화로 이행할 수 있다.

정부가 9개의 협상대상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당초 WTO농업협정에서는 10년간 인정받아왔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연장받기 위해서는 관련 회원국들에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협상대상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합의를 해주는 것은 WTO농업협정에 비춰 당연한 것이었다. 정부가 이들 국가에 한 추가합의의 내용을 보면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 등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국제협상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에 지나지 않는 것

들이다.

이러한 쌀협상의 결과에 대하여 국회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WTO농업협정상 우리나라는 작년 12월31일까지 관세화 유예를 허용받고 있을 뿐이므로 금년 1월1일부터는 관세화로 이행해 할 국제협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가 실패로 끝날 경우, 즉시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국내 쌀농가에 대한 후유증은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제적인 신인도 추락을 감수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WTO·DDA협상이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등 각종 통상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과거 미국 의회(상원)는 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통상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은 미 행정부가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의회 비준동의의 확실성을 제고하고자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나가기 전에 의회로부터 '통상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행정부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갖는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명분이거나 근거없이 정부가 다수의 국가와 어렵게 타결한 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정부의 대외협상에 매우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 쌀개방의 딜레마

### 광화문에서



김 상 영

경제부장

youngkim@donga.com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될 혹 덩어리 하나가 자라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커지게 돼 있다.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얘기다. 한국은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에 대해 10년간 시장개방을 유예 받았다. 당시 특정 농산물에 대해 개방을 유예 받은 나라는 5개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쌀을, 이스라엘이 양고기에 대해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후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개방을 했고 한국과 필리핀만이 남아 있다.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4년 말까지 10년간. 정부는 지난해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관련 당사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고, 수입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당장 올해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외면하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뤘다. 농민단체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UR협상이 타결될 때 우리는 10년 후에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

난 오늘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이 쌀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관세를 물리면서 전면개방을 하느냐, 아니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서 전면개방을 미루느냐이다. 두 방안이 모두 싫다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고 국제무역질서에서 빠지면 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은 정부도, 농민단체도,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들여오지 못하면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함께 수입해야 한다. 시판해야 하는 물량도 마찬가지다. 올해 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한꺼번에 수입쌀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농림부 분석에 따르면 지금 국회를 소집해 표결한다고 해도 반대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표결이 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질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비준이 부결되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부 의원이 묘안을 생각해낸 모양이다. "농림부 차관을 희생양으로 날리면 된다"는 말이 떠돈다. 참으로 한국 정치다운 발상이지만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할 셈이다.

농민단체도 멀리 보아야 한다. 사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이다. 이 제도 덕에 수입쌀이 들어와도 최소한의 가격은 보장되는 셈이다. 전면개방도 안 하고 의무수입물량도 없다면 얼마나 좋으리라는 안 되는 일이다.

한국인에게 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방을 막기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차라리 시장개방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는 실정이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빠를수록 사회적 부담이 적다. 서로 부담을 떠넘기며 미뤄보야 혹만 커진다. 농림부와 농민단체, 국회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 쌀개방의 딜레마

## | 광화문에서 |



김상영  
경제부장  
youngkim@donga.com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될 혹 덩어리 하나 가 자라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커지게 돼 있다.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얘기가. 한국은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쌀에 대해 10년간 시장개방을 유예 받았다. 당시 특정 농산물에 대해 개방을 유예 받은 나라는 5개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쌀을, 이스라엘이 양고기에 대해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후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개방을 했고 한국과 필리핀만이 남아 있다.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유예기간은 1995년 1월부터 2004년 말까지 10년간. 정부는 지난해 유예기간이 끝나가자 관련 당사국들과 다시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개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고, 수입쌀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당장 올해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외면하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뤘다. 농민단체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다.

UR협상이 타결될 때 우리는 10년 후에는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

난 오늘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이 쌀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다. 관세를 물리면서 전면개방을 하느냐, 아니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서 전면개방을 미루느냐이다. 두 방안이 모두 싫다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고 국제무역질서에서 빠지면 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은 정부도, 농민단체도,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올해 의무수입물량을 들여오지 못하면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함께 수입해야 한다. 시판해야 하는 물량도 마찬가지다. 올해 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한꺼번에 수입쌀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진다.

농림부 분석에 따르면 지금 국회를 소집해 표결한다고 해도 반대표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표결이 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질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비준이 부결되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부 의원이 묘안을 생각해낸 모양이다. "농림부 차관을 희생양으로 날리면 된다"는 말이 떠돈다. 참으로 한국 정치인다운 발상이지만 비준의 필요성은 인정할 셈이다.

농민단체도 멀리 보아야 한다. 사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혜택이다. 이 제도 덕에 수입쌀이 들어와도 최소한의 가격은 보장되는 셈이다. 전면개방도 안 하고 의무수입물량도 없다면 얼마나 좋으리라는 안 되는 일이다.

한국인에게 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개방을 막기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시장개방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는 실정이다.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빠를수록 사회적 부담이 적다. 서로 부담을 떠넘기며 미뤄봐야 흑만 커진다. 농림부와 농민단체, 국회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 경향신문

### 기고

2005년 07월 30일 023면

# 쌀협상 비준 논란 끝내야



이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쌀 협상 비준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준하자' '재협상을 하자' 'DDA 협상 때까지 비준 여부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정확한 것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수기를 맞는 농업인의 심정은 착잡하다. 올해만큼 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해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첫해이고 10년 후 당찰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적인 쌀산업정책이 시작되어야 하는 해이다.

농업인은 과연 올해는 40kg짜리 벼 한 포대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생산된 쌀을 다 팔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추수를 해야 한다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비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쌀산업 정책과 DDA 협상대화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 역시 정책 수립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쪼뚝 더위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다.

10년 후에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영원히 외국 쌀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상으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면, 비준 연기인들 재협상인들 재재협상인들 못할쏘냐?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없다. 우리 쌀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우리 쌀을 사랑하는 소비자, 확고한 쌀산업 정책을 세우는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협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였다거나 협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함양했다거나 협상의 결과 농촌이 살기 좋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협상으로는 다만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다. 농촌을 이해하는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약간이라도 더 낮을 때,

국민의 식생활 관습이 조금이라도 덜 서구화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쌀산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에게 쌀 협상은 무엇인가? 쌀 협상은 단지 '8% 수입' '10% 시판' '신속한...' 등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요약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길고 지루했던 쌀 협상은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와 정부가 우리 쌀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10년 전 UR 협상에서 우리는 지금의 쌀협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쌀에 대한 의지와 인식의 부족으로 쌀산업을 만족할 만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제 또 협상에 의존하고 연연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쌀 공간을 지키는 열쇠를 외국에 내주는 것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 열쇠는 우리 사이에 있다. 시련의 시절이고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논쟁보다는 신속한 현실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 쌀 협상 결과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 경향신문

기고

2005년 07월 30일 023면

## 쌀협상 비준 논란 끝내야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쌀 협상 비준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준하자' '재협상을 하자' 'DDA 협상 때까지 비준 여부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서로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정확한 것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은 다가오고 있다.

올해 추수기를 맞는 농업인의 심정은 착잡하다. 올해만큼 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해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 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는 첫해이고 10년 후 다철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종합적인 쌀산업정책이 시작되어야 하는 해이다.

농업인은 과연 올해는 40kg짜리 벼 한 포대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고, 생산된 쌀을 다 팔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하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추수를 해야 한다면 입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비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쌀산업 정책과 DDA 협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역시 정책 수립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뽕통 더위 속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다.

10년 후에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영원히 외국 쌀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상으로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다면, 비준 연기인들 재협상인들 재재협상인들 못할쏘냐?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없다. 우리 쌀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우리 쌀을 사랑하는 소비자, 확고한 쌀산업 정책을 세우는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이 협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였다거나 협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함양했다거나 협상의 결과 농촌이 삼기 좋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협상으로는 다만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다. 농촌을 이해하는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아 있을 때,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약간이라도 더 낮을 때

에, 국민의 식생활 관습이 조금이라도 덜 서구화되었을 때에 제대로 된 쌀산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고 다른 한편으로는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에게 쌀 협상은 무엇인가? 쌀 협상은 단지 '8% 수입' '10% 시판' '신속한...' 등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요약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길고 지루했던 쌀 협상은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와 정부가 우리 쌀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10년 전 UR 협상에서 우리는 지금의 쌀협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결국 쌀에 대한 의지와 인식의 부족으로 쌀산업을 만족할 만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제 또 협상에 의존하고 연연해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쌀 공간을 지키는 열쇠를 외국에 내주는 것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 열쇠는 우리 사이에 있다. 시련의 시련이고 신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논쟁보다는 신속한 현실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 쌀 협상 결과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여 백

## **VII. 최근기사 · 사설('05년 8월)**

여 백

— 《 관련 기사 · 사실 》 —

- **쌀 가마당 지원금 1,639원 인상**<2005. 8. 18, 중앙일보 4면>
  - 국회비준 추가대책 확정, 당정 내년부터 올 공공비축 물량 400만 섬 농가서 매입
  - ▶ 뉴스분석- 또 손 든 정부...농민 요구 20건 중 16건 수용
-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2005. 8. 18, 서울신문 3면>
- **쌀 고정직불금 단가 상향 내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2005. 8. 18, 서울경제 4면>
- **쌀 고정직불금 70만원으로, '당정' 내년부터 10만원 인상** <2005. 8. 18, 국민일보 2면>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2005. 8. 18, 한겨레 6면>
- **쌀 고정직불금 내년 ha당 70만원으로** <2005. 8. 18, 머니투데이 27면>
  - 당정, 연체농가 희생지원도
- [기자의 눈] **농업경쟁력은 누가 챙기나**<2005. 8. 22, 한국일보 김신영 경제부 기자 A2면>
- [독자칼럼] **쌀 협상 국회처리 언제 할건가?**<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2005. 8. 2, 조선일보 A25면>
- [시론] **누구를 위한 쌀 협상 비준 거부인가** <안덕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5. 8. 5, 서울 A31면>
- [사설] **피주기식 농가지원 언제까지인가**<2005. 8. 18, 중앙일보 30면>
- [사설] **쌀 비준안 언제까지 반대할 건가**<2005. 8. 22, 서울신문 27면>
- [기고] **쌀협상 비준 늦출 수 없다**<2005. 8. 22, 농림부 차관보, 머니투데이 6면>
- [기고] **쌀협상 조기 비준돼야**<2005. 8. 29, 농림부 홍보관리관, 농민신문 >

여 백

# 쌀 가마당 지원금 1639원 인상

당정 내년부터 을 공공비축 물량 400만 섬 농가서 매입

## 국회비준 추가대책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농가에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돈(고정직접금)을 현행 쌀 80kg 한 가마당 9836원에서 내년부터 1만147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새로 도입되는 공공 비축 물량을 올해는 400만 섬으로 정하고 전량 농민에게서 매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비준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런 내용의 쌀 협상 국회 비준 추가 보전 대책을 확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협상안 비준을 앞두고 그동안 농민단체가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불안울 해

소하기 위해 미국 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을 올해 50곳에서 내년에는 110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민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내년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4000억원)보다 1780억원 늘어난 578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 양육비(평균 월 12만원) 지원 대상 농가도 현재 경지면적 2ha(1ha=3000평)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WTO 쌀 협상안=한국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를 10년간 연장하고 대신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 쌀 물량을 올해 22만5000t에서 2014년 40만8700t으로 늘린다. 이중 밥 짓는 쌀용으로 올리는 수입 쌀의 10%를 시판하고 2010년 이후 2014년까지는 이 비율을 30%까지 올린다.

김중문·김선하 기자  
yoonn@joongang.co.kr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을 앞둔 가운데 17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벼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담양=임광삼 기자

## 농민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농민단체 등의 요구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수용안
미국종합처리장 건조장설치 확충	내년에 110곳으로 확대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예산 내년에 4982억 원 확충
관공 비축 확대	관공비축 물량은 600만 섬으로 하고 올해는 400만 섬 매입
불고령 직할농 단지 연상	ha당 60만원에서 내년에 70만원으로 연상
농산보 증부 출연 확대	올해 4000억원 출연에서 내년에 5780억원 출연
전환형 농업 예산 확대	올해 1492억원에서 내년에 2018억원으로 증액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내년부터 농지은행제 시행사업 실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내년에 경지도 14도 이상인 쌀 18만7000ha에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농지면적 2ha 미만 농가에서 내년에 5ha 미만 농가로 확대

자료: 농림부, 열린우리당

## ▶뉴스분석 또 손 든 정부... 농민 요구 20건 중 16건 수용

정부와 여당이 농민에게 또다시 대폭 양보했다. WTO 쌀 협상안을 국회에서 비준받기 위해서다. 농업 협상과 관련된 '요구하면 돌아준다'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쌀 협상은 과거 우부과이라운드(URI)나 자유무역협정(FTA) 때와 달리 '선 대책-후 협상'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협상을 끝낸 뒤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만들던 과거 방식과는 사뭇 달랐다.

이에 따라 ha당 60만원씩(80kg 한 가마당 9836원) 정부가 직접 벼농사 농가에 현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만든 뒤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막상 협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농민단체가 중국·아르헨티나 등과 맺은 부가 합의 내용을 문제삼아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등은 국회 비준을 앞두고 WTO 협상안 비준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

면 정부에서 더 얻어낼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여기에 굴복했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 대책을 만들 때에 비해 여건이 달라져 사전대책의 보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민단체가 요구한 정책자금의 급리 인하나 대졸금 상환 연기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지나친 지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음 대책을 만들 때와 여

건이 달라졌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에 당정이 수용하지 않은 요구도 9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때 습썬 받아들이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농민단체 등의 요구에 밀려 원칙을 깨고 또 추가 지원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예정된 도하 개방 어젠다(DDA) 협상 때에도 농민들의 '방그릇 챙기기'식 지원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김중문 기자

# '서울신문

08월 18일 003면

## 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 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종합적인 농민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공비축물량인 600만섬과 한 해 매입물량 300만섬을 유지하되 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400만섬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지원 확대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비축물량 확대, RPC(미국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해온 핵심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건의 사항 가운데 RPC의 건조저장 시설을 내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농업기반공사 채권 3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연체농가 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제도 내년 조기 도입 ▲농지은행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전국적 확대 실시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농가를 현행 2ha 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황장석기자 suronc@seoul.co.kr

# 서울경제

08월 18일 004면

## 쌀 고정직불금 단가 상향

내년부터 ha당 70만원으로

쌀시장 개방과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가 2006년부터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공공비축물량의 경우 세계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600만섬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섬으로 하되, 첫째인 올해는 400만섬까지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국회비준동의안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안을 처리하는 대신, 이를 비롯한 종합적인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일보

2005년 08월 18일 002면

## 쌀 고정직불금 70만원으로 당정, 내년부터 10만원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협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위해 종합적인 농민지원대책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농민 지원책으로 쌀가격 변동에 대한 정

부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을 내년까지 11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공공비축물량인 600만섬과 한 해 매입물량 300만섬을 유지하되 올해의 경우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400만섬을 매입키로 했다.

박재찬기자 jeep@kmb.co.kr

# 한겨레

08월 18일 006면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공 비축용 쌀 600만섬을 정부가 매입해 마련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헥타르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쌀협상 비준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해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 물량을 세계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에 따라 연간 600만섬으로 하고, 매년 300만섬씩 사들였다가 남는 양은 되팔기로 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 머니투데이

2005년 08월 18일 027면

## 쌀 고정직불금 내년 ha당 70만원으로

### 당정, 연체농가 희생지원도

쌀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이 현행 헥타르(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체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민 지원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쌀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 비축물량 확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확대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20건의 건의사항 중 16건을 수용했다.

먼저 당정은 공공 비축물량을 세계 식량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600만섬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섬으로 하되 시행 첫해인 올해는 400만섬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쌀개방 확대와 안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자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원배 기자 cwb@

# 한국일보

2005년 08월 22일 a02면

## 기자의 눈

## 농업경쟁력은 누가 챙기나

‘당정은 농민들의 핵심 건의사항 20건 중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부는 쌀 협상 흥정 높음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동안 숨을 고르는 듯 했던 정부와 농민 사이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정은 얼마 전 농민단체 측이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 20개를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 공공비축물량 확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16개 항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당정이(우리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대책



김신영  
경제부 기자

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 측의 불만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25일)키로 결정한 19일 국에 달려 주말 내내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정부 대책은 기존의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것들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회 비준을 원칙적으로 반대

한다면서도 비준 과정을 앞두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농민단체들의 모양새 역시 양겨주춤해 보인다.

무엇보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유예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수립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 비준이라는 눈앞의 산을 두고 농민과 정부가 싸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그리고 그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ddalgi@hk.co.kr



## 쌀 고정직불금 ha당 10만원 인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공비축용 쌀 600만섬을 정부가 매입해 마련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헥타르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쌀협상 비준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화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병헌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해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 물량을 세계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에 따라 연간 600만섬으로 하고, 매년 300만섬씩 사들였다가 남는 양은 되팔기로 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 쌀 고정직불금 내년 ha당 70만원으로

### 당정, 연체농가 회생지원도

쌀가격 변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고정직불금이 현행 헥타르(ha)당 60만원에서 내년부터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체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민 지원대책을 확정하는 한편 쌀협상 비준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공공 비축물량 확대,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확대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20건의 건의사항 중 16건을 수용했다.

먼저 당정은 공공 비축물량을 세계 식량농업기구(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인 600만섬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300만섬으로 하되 시행 첫해인 올해는 400만섬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쌀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감안,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금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원배 기자 cwb@

## 기자의 눈

## 농업경쟁력은 누가 챙기나

"당정은 농민들의 핵심 건의사항 20건 중 대부분을 수용기로 했다." "그것은 새활간 거짓말이다. 정부는 쌀 협상 흥정 높음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동안 숨을 고르는 듯 했던 정부와 농민 사이의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당정은 얼마 전 농민단체 측이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 20개 중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용키로 결정한 것은 올해 공공비축물량 확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16개 항에 달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당정이(우리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대책



김신영  
경제부 기자

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 측의 불만은 국외 통일외교공상위가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25일)키로 결정한 19일 국회 담회 주말 내내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정부 대책은 기존의 '농업·농촌 발전 기본 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것들로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회 비준을 원칙적으로 반대

한다면서도 비준 과정을 앞두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농민단체들의 모양새 역시 양겨주춤 보인다.

무엇보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를 아무도 챙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유예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수립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 비준이라는 눈앞의 산을 두고 농민과 정부가 싸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그리고 그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ddalgi@hk.co.kr

독자 칼럼

쌀 협상 국회처리 언제 할진가?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학박사

작년 말 타결된 쌀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오리무중이다.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가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 단체장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를 의식하다 농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쌀 협상 결과의 비준 동의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연기되는 것이 우리 쌀 농가에 도움이 될까? 일부 농민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 다 농업협상의 결과를 봐 가며 올해 말까지 비준 동의

안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연기되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협상 상대국의 제소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는 관세화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유예로 인해 올해 안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수입쌀의 수입이 내년으로 미뤄져, 쌀 수출국들이 이를 그냥 보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국내시장에 유통시키기로 한 수입쌀 시중판매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협상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결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만에 하나 협상결과의 불이행은 이유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라도 하면 그때는 어찌될 것인가. 도

비준 동의안 특장처리 쌀 시장 불안정성만 늘리고 관세화 유예에 의문 초래

대체 어떤 정부가 쌀 농가를 담보로 이러한 도박을 할 수 있겠는가.

비준 동의안이 늦게나마 가결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연내 수입쌀 도입을 위해 시간에 쫓겨 수입쌀을 사다보면 수출국들이 고의로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품질이 나쁜 저급 쌀 구매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입쌀 시중판매를 위한 정부의 공매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국내 수

입쌀 판매상들의 저가 입찰도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불안정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쌀 농가들의 소득감소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비준 동의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투쟁이나 시위,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장 처리는 실제로 쌀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정부가 설명한 대로 대외원조용 쌀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또한 동식물 검역절차가 매 단계마다 철저하게 이루어져 유해한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도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향후 농산물 개방 협상에서 소외된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독자칼럼 ■

쌀 협상 국회처리 언제 할진가?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학박사

작년 말 타결된 쌀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오리무중이다.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가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 단체장 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를 의식하다 농민단체의 요구에 떠밀린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쌀 협상 결과의 비준 동의가 무산 되거나 장기간 연기되는 것이 우리 쌀 농가에 도움이 될까? 일부 농민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 다 농업협상의 결과를 봐 가며 올해 말까지 비준 동의

안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장기간 연기되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협상 상대국의 제소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지 않는 관세화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유예로 인해 올해 안에 들여와야 하는 의무수입량의 수입이 내년으로 미뤄져, 쌀 수출국들이 이를 그냥 보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국내시장에 유통시킴으로 한 수입쌀 시중판매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협상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결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만에 하나 협상결과의 불이행은 이유로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라도 하면 그때는 어찌될 것인가. 도대체 어떤 정부가 쌀 농가를 담보로 이러한 도박을 할 수 있겠는가.

비준 동의안 녹장처리  
쌀 시장 불안정성만 늘리고  
관세화 유예에 의문 초래

비준 동의안이 늦게나마 가결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연내 수입쌀 도입을 위해 시간에 쫓겨 수입쌀을 사다보면 수출국들이 고의로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품질이 나쁜 저급 쌀 구매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입쌀 시중판매를 위한 정부의 공매기간도 충분하지 않아 국내 수

입쌀 판매상들의 저가 입찰도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쌀 시장의 불안정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쌀 농가들의 소득감소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비준 동의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부쟁이나 시위,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녹장 처리는 실제로 쌀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정부가 설명한 대로 대외외조용 쌀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또한 동식물 검역절차가 내 단계마다 철저하게 이루어져 유해한 수입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도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향후 농산물 개방 협상에서 소외된 농업인의 목소리를 감청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론

누구를 위한 쌀협상 비준 거부인가



안덕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통상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제적인 '협상 미숙아'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

**쌀** 시장 완전개방을 연기하기 위해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씨름해 얻어낸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타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148개 WTO 회원국 가운데 농업 부문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허용받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적으로 허용받은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특별한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짜 점심은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2만 5000t인 쌀 수입 허용량을 2014년까지 40만 8000t으로 늘리고, 중국산 사과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했다. 부르르 입을 하고 세계 각지로 협상하러 다녀야 했던 실무진들의 고초 또한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진행된 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자국내에서는 “과다한 양보를 했다.”, “혹시 이런 합의가 있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떠들썩했던 시작과 달리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국회는 비준 여부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뤄놓았다. UR 이후 통상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해서만 여야가 구분없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잡이가 벌어지는 국회지만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만 신통하리만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 셈이다.

**국** 제 통상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를 넘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정치의 선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농산물, 특히 쌀 시장을 개방하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약제라는 것을 여야 의원 누구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묘한 공동보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통상협상을 해서 안 되는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10년전 UR 당시 농산물 시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경질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는 칠레산 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패허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막혀 국회 비준에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여전히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자는 합리적인 주장은 “개방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아서 안 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협상 상대국들이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의논하는 협상 테이블마다 우리 협상팀이 궁지에 몰리는 이유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제적인 ‘협상 미숙아’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최소 수준의 농업 개방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번 쌀협상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표심(票心)에는 온전히 투영되지 못하지만 국민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WTO 148개 전 회원국이 우리나라 쌀의 특수성을 인정해 개방 연기를 승인한 이번 협상이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거부로 불발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시론

누구를 위한 쌀협상 비준 거부인가



안택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통상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제적인 협상 미숙아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

쌀 시장 완전개방을 연기하기 위해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씨름해 얻어낸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타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148개 WTO 회원국 가운데 농업 부문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허용받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더욱이 우무과이라운드(UR)에 이어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적으로 허용받은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특별한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짜 점심은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2만 5000t인 쌀 수입 허용량을 2014년까지 40만 8000t으로 늘리고, 중국산 사과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기로 합의했다. 부르른 입을 하고 세계 각지로 협상하러 다녀야 했던 실무진들의 고초 또한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진행된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자 국내에서는 “과다한 양보를 했다.”, “혹시 이런 합의가 있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떠들썩했던 시작과 달리 번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국회는 비준 여부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뤄놓았다. UR 이후 통상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해서만 여야가 구분없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잡이가 벌어지는 국회지만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만 싹뚱하리만큼 보조쯤 잘 맞추고 있는 셈이다.

국제 통상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를 넘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정치의 선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농산물, 특히 쌀 시장을 개방하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약재라는 것을 여야 의원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묘한 공동보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통상협상을 해서 안 되는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10년전 UR 당시 농산물 시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경질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는 칠레산 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패허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딱혀 국회 비준에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여전히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자는 합리적인 주장은 “개방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아서 안 된다.”는 감경파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협상 상대국들이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의논하는 협상 테이블마다 우리 협상팀이 궁지에 몰리는 이유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협상 결과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제적인 협상 미숙아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최소 수준의 농업 개방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번 쌀협상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표심(票心)에는 온전히 무영되지 못하지만 국민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WTO 148개 전 회원국이 우리나라 쌀의 특수성을 인정해 개방 연기를 승인한 이번 협상이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거부로 불발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 퍼주기식 농가지원 언제까지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쌀 협상 비준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농민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20건의 지원책 가운데 16건을 들어 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쌀값 하락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메워주는 직불금을 크게 올려주고, 농민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몇 가지 무리한 요구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농민단체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쌀 타결된 쌀 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민단체의 웬만한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자세였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이 '쌀 협상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니 그대도 드러난다. 정부는 쌀 협상에 앞서 쌀 소득 보전 직불제의 도입 등 사전대책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쌀 협상의 결과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는 쌀 시장의 개방에 대해 쌀 농가가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한다. 그러나 쌀 시장의 개방은 10년 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고, 지난해 협상의 결과 얻어낸 '추가 10년간 개방 유예'가 농민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인 만큼 협상의 무효화나 비준 불가(不可)와 같은 딱무가내식 반대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가 지원책이 농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개방 문제를 풀아가는 방식이 한 단계 진전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버티고 보려면 결국 더 얻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부의 이 같은 무원칙한 태도는 앞으로 이익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농민단체들도 이제는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10년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 '서울신문

## 쌀 비준안 언제까지 반대할 건가

정부의 종합농민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쌀 협상안 비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대로 가면 올 가을에도 국회 비준을 낙관할 수 없어 우려된다. 심지어 어떤 지원대책이 나와도 농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까지 가담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당초 쌀 협상결과는 올해부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인 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외국과 협상해 타결지은 안으로 이들 농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국회가 비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대외신뢰를 떨어뜨리는 점에서 문제다.

더욱이 야당과 일부 농업계에서는 올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추이를

보며 쌀협상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말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원래 별개인 쌀 협상과 DDA협상을 분리해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쌀협상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행에도 어긋나며 향후 우리 정부와 농업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여나 국내 일각에서 우리가 버티면 쌀 개방을 막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측이 있을까 우려된다. 개방의 파고는 대세이며 그것을 막기는 불가능하다. 농민과 농민단체는 정부의 예산 범위와 다른 분야 국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구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지난 수십년간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계속 대외개방을 늦춰가며 더 많은 농업 지원만을 요구하다가 개방에 대비할 시간만 축내게 될 것이다.

기고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의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 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는 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해 2005년부터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아쉽게도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려운 통상협상을 통해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던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고 협상 상대국들이

그러나 농업인들은 실효협상 결과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책 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농민단체와

정부·농업인 손잡고 경쟁력 갖출때

의 간담회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했다.

이 16건 중에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공공비축 대입물량 확대, 주요 곡물의 지급률 목표치 설정, 농지은행제도

쌀협상 비준 늦출수없다

제시한 양자 통상협안 요구 일부를 들어줬다.

정부는 이미 '선대책-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협상과 WTO 농업협상(DDA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 개방 확대에 대비해 왔다. 쌀 협상 개시

비준 지연 '10년 추가유예' 도루묵

이전부터 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무·용자계획이 바로 대표적인 선대책이다. 특히 쌀시장 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 등에 대비해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해 쌀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했다. 직접지불제도에 따르면 올해 쌀 값이 5% 하락해 80kg 1가마당 15만30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격인 17만7000원의 차액의 85%인 1만4500원을 직불금으로 받게 되므로 농가의 실제 소득은 16만7000원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공비축제 도입' '고품질 쌀 생산대책' 등도 마련했다.

조기 도입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요구해 온 많은 사항이 포함됐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협상의 결과로 확보한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경쟁력 있게 바꾸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결과의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농업인이 손잡고 인젠가는 맞이할 시장개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협상결과가 WTO 148개 전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제적으로는 이미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쌀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나라의 신뢰만 실추할 뿐이다. 이번 쌀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농업인이 다 함께 우려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다. 이번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고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의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농산물에 대한 모든 수입 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는 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한해 동안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해 2005년부터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아쉽게도 2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려운 통상협상을 통해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던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하고 협상 상대국들이

그러나 농업인들은 쌀협상 결과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책 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농민단체와

정부·농업인 손잡고 경쟁력 갖출때

의 간담회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핵심건의 사항 20건 중 16건을 수용했다.

이 16건 중에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공공비축 대입물량 확대, 주요 곡물의 자금률 목표치 설정, 농지는영제

쌀협상 비준 늦출수없다

제시한 양자 통상협안 요구 일부를 들어줬다.

정부는 이미 '선대책-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협상과 WTO 농업협상(ODA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업 개방 확대에 대비해 왔다. 쌀 협상 개시

비준 지연 '10년 추가유예' 도루묵

이전부터 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의 부·융자계획이 바로 대표적인 선대책이다. 특히 쌀시장 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 등에 대비해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해 쌀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했다. 직접지불제도에 따르면 올해 쌀 값이 5% 하락해 80kg 1가마당 19만300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격인 17만7000원의 차액의 85%인 1만4500원을 직불금으로 받게 되므로 농가의 실제 소득은 16만7000원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공비축제 도입' '고품질 쌀 생산대책' 등도 마련했다.

조기 도입 등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요구해 온 많은 사안이 포함됐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협상의 결과로 확보한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경쟁력 있게 바꾸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상결과에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농업인이 손잡고 인건가는 맞이할 시장개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협상결과가 WTO 148개 전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제적으로는 이미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쌀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나라의 신뢰만 실추할 뿐이다. 이번 쌀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농업인이 다 함께 우려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다. 이번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기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이때부터 농산물에 적용되던 수량제한 등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국내의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만 내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됐다. 우리나라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로 개방했으나 쌀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국·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해 올해부터 또다시 10년 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20년간 관세화유예는 특별대우**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로 개방된 상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

# 쌀협상 조기 비준돼야

례는 우리나라의 쌀이 유일하다.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쌀협상과 현재 진행 중인 도하계 발아젠다(DDA) 농산물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해 왔다.

**'선대책 후개방'--개방대비 철저**

2004~2013년 10년 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부용자계획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선대책이다. 특히 쌀협상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해 쌀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산지 쌀값 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올해 쌀값이 5% 하락해 15만3,000원이 된다고 해도 쌀 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받아 80kg당 16만7,000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마련한 대책 외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농민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농민단체와 네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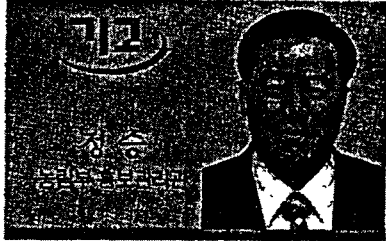
핵심 건의사항 20건을 농민단체와의 합의하에 도출했다. 이 중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이제 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쌀협상 결과가 원만하게 비준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쌀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어려운 대외협상을 통해 확보한 향후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결과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비준 안되면 관세화유예 효력없어**

이는 결국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의 가격차이에 해당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500-1507.

• 본 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쌀협상 조기 비준돼야

래는 우리나라의 쌀이 유일하다.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쌀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쌀협상과 현재 진행 중인 도하계 받아준다(DDA) 농산물 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해 왔다.

## '선대책 후개방'--개방대비 철저

2004~2013년 10년 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무용지계획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선대책이다. 특히 쌀협상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 및 가격하락 등에 대비하여 2005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법으로 뒷받침해 쌀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산지 쌀값 16만1,000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올해 쌀값이 5% 하락해 15만3,000원이 된다고 해도 쌀 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받아 80kg당 16만7,000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마련한 대책 외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농민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농민단체와 네차레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핵심 건의사항 20건을 농민단체와의 합의하에 도출했다. 이 중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

이제 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쌀협상 결과가 원만하게 비준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쌀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부가 어려운 대외협상을 통해 확보한 향후 10년 간의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결과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 비준 안되면 관세화유예 효력없어

이는 결국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의 가격차이에 해당되는 관세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500-1507.

• 본 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바뀌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속도가 빨라졌다. 이때부터 농산물에 적용되던 수량제한 등 모든 수입제한 조치가 철폐되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만 내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확립됐다. 우리나라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로 개방했으나 쌀에 대해서만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미국·중국 등 9개국과 협상해 올해부터 또다시 10년 간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얻어냈다.

## 20년간 관세화유예는 특별대우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로 개방된 상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한 95년 이후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사